

제1장 총 칙

- 제1조 명 칭) 본 단체는 민주화운동 전국 청년연합이라고 부른다.
- 제2조 소 개) 민주화운동 전국 청년연합의 중앙본부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3조 목 적) 민주화운동 전국 청년연합은 (1) 인간생명의 존엄성 구현을 그 최고 이상으로 하며 (2) 민중생활 개선에 주력하여 대중운동 발전을 위한 민중참여를 지원하고 (3) 민주주의와 자주적 민족통일을 지향하며 (4) 회원 상호간의 연대와 상호부조를 굳건히하고 사회운동의 중심점 형성을 위해 전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과 회의

제4조 (회원자격) 본단체의 목적과 부합되는 활동으로 인하여 각곳 현장에서부터 고난을 당한사람 혹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청년으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이는 모두 회원 될 자격이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각급회의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임원이 아닌 회원이라도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안하는 권리를 갖는다.
- (3) 모든 회원의 권리는 평등하며 연령, 성별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 (4) 회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구성된 각급회의의 결정에 성실히 따르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며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8조 (총 회) (1) 정기총회는 6개월에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집행위의 결의를 거쳐 집행위의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대간부회의로 이를 대신한다.

제9조 (총회의 의결사항)

- (1) 각급 회의의 임원선출, 지도위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 및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 (3)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집행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 (5) 회원 5인이상의 연명으로 제안된 사항

제10조 (집행위원회)

- (1) 본 단체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위원회의 위원은 5인 내지 15인의 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총회는 필요한 위원의 선임을 집행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집행위는 지부의인가 및 회무전반에 관한 사항과 총회의 위임사항, 기타 이 규약이 정한 사항 등을 다룬다
- (3) 집행위원회는 총무, 재정, 홍보, 사회, 인권 여성등 6개부서를 둔다.

제16조 (지도위원)

집행위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도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위원회회의)

- (1) 지도위원회회의는 지도위원 3인 이상의 요구 또는 집행위의 결의가 있을 때에 집행위의장의 소집공고에 의해 개최된다.
- (2) 지도위원회회의는 월 1회의 정기회의를 갖는다.

제3장 재 정

제19조 (예산결산)

- (1)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 (2) 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과 결산의 보고는 비공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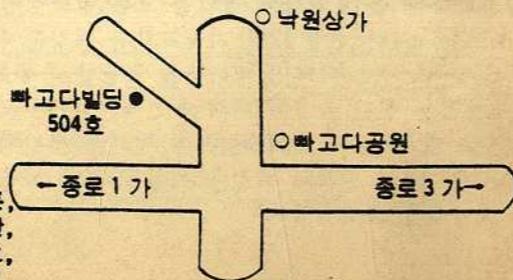
1983. 9. 30. 제정
1984. 4. 17. 수정

집행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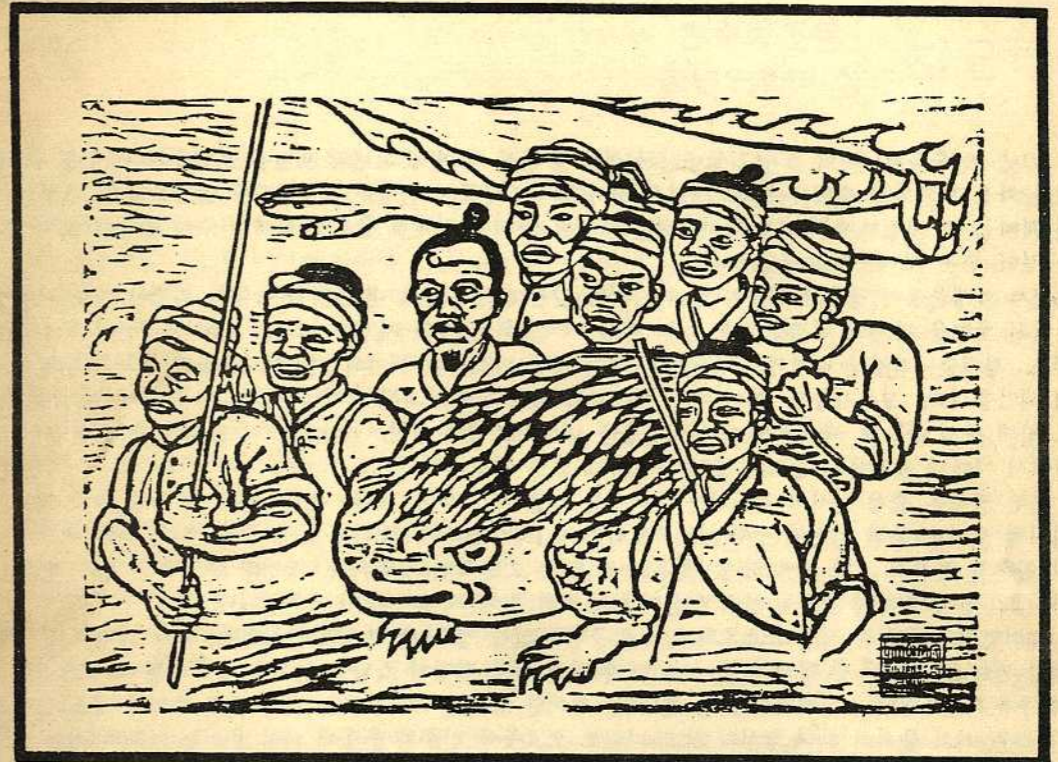
의 장 김근태 부의 장 장영달 총 무 박우섭
홍보부장 박계동 사회부장 연성수 재정부장 홍성열
여성부 임태숙

지도위원

강우일, 계훈제, 고영근, 고 은, 김병걸, 김승균, 김승훈, 김종철, 김태홍, 김택업, 문익환, 문정현, 박종태, 백기완, 신내운, 송기원, 송기인, 신경림, 양 흥, 여익구, 예춘호, 오태순, 윤반웅, 이경일, 이부영, 이우정, 이재오, 임채정, 함세웅, 호인수, 황상근



민주화의 길



- 민족통일의 대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참된 민주정치는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
 - 평등하고 인간적인 생활을 위한 민주자립경제가 이룩되어야 하며, 부정부패 특권경제는 마땅히 청산되어야 한다.
 - 역동적이고 건강한 민중의 삶을 위하여 자생적이고, 창조적인 문화, 교육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 국제평화와 민족 생존을 위해 냉전 체제의 해소와 핵전쟁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창립선언문 중에서)

민주화운동의 깃발을 들며

80년 '민주화의 봄'이 5·17 쿠데타에 의해 무너진 지 벌써 4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난 4년동안 우리는 좌절과 좌책감 속에서 방황하면서도 뼈아픈 자기비판과 반성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5월의 참담했던 패배는 그 이전까지 우리가 쌓아올렸던 역량의 한계를 일깨워 줌과 동시에 민주화 운동에 보다 넓은 지평을 열어 주는 계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학생운동이 공포와 좌절의 늪에서 가장 앞서서 탈출하고 내적 역량 확대와 과감한 가두 시위를 통해 침체된 국면을 타개해 나갔습니다. 이어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양심의 목소리를 되찾았고 김대중·김영삼 양씨가 공동성명을 내는 것을 비롯하여 재야의 민주인사들도 민주화의 대열에 합세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도 80년 이후 계속해서 철저하게 파괴된 폐허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 블랙리스트 반대 투쟁 등으로 새로운 출발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 땅의 민주화 운동은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권은 출범 당시의 적나라한 폭력성을 감춘 채, 석방·해금·복학·복직 등 각종 화해 제스처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화해 제스처나 최소의 민주적 절차가 정작 진짜 알맹이들은 빠져 있는 기만적인 것입니다. 정권의 폭력적 본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통치의 전술이 가식적인 미소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저들 스스로의 입으로 '폭력 없는 정치'를 부르짖어야 하는 현재 국면의 정세를 주체적인 기회로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다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우유부단하거나 소심해져서는 안 됩니다. 거대한 암벽을 기어오르는 자가 결코 추락의 공포에 떠는 일없이 작은 바위 틈서리 하나 놓치지 않고 디디고 오르듯이 민주화 운동에 나선 우리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계기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운동 발전의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담한 마음가짐으로 각 부문은 투쟁력의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각기의 운동틀을 재건하여 굳건한 상호연대를 결성해 내야 합니다.

민청련은 이와 같은 상황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한데 모여 결성하였습니다. 민청련은 투쟁성의 회복을 첫번째 과제로 제시합니다. 전술의 다양한 개발이란 투쟁성의 회복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투쟁성의 회복은 운동에 대한 소극성의 탈피에서 시작됩니다. 소극성은 흔히 평론가적 자세로 나타납니다. 평론가적 자세는 결정론이나 기계론과 같은 그릇된 인식에서 나옵니다. 그릇된 인식은 상황의 해석, 혹은 객관적 분석에 안주하지만 참된 인식은 주체적 실천의 길로 이끕니다. 또한 소극성은 자기 희생 없이 운동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엄숙한 진리를 외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철저한 자기 헌신을 결단할 것을 모든 이들에게 촉구합니다. 그 누구도 이 나라의 민주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청년 내부의 역량을 체계화시켜야 합니다. 운동 경험의 축적과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의견을 교환하여 실천적 과제로 통합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내부의 오해와 편견,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학생운동본부

학생운동본부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의장 김근태

세째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조망 아래 다른 운동세력과 구체적 연대가 맺어져야 합니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종교 및 재야운동, 지식인·문화인 운동 등과의 굳건한 연대 위에서 분산적 운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화 운동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각 부문은 서로 적극 지원하는 한편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풍토가 되어야 합니다.

네째, 대중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는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대중 역량이 발전되지 않고는 이 땅의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해 대중 역량이야말로 민주화를 추진시키는 기본적인 원동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중운동은 아직 충분한 성장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중운동에의 참여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운동 방향의 모색과 방법의 개발을 위해 조사 및 연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청년 운동은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운동에서 탈피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원숙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기에 민청련은 현재 우리의 역량 수준으로 보아 무리가 없는 초보적 차원의 운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하에 민청련은 출범하였고 그 활동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드디어 회보도 창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주화의 길」은 민청련의 기관지로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첫째, 민주화 운동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은 올바른 운동론 하에서 전개되어야 하며, 올바른 운동론은 치열한 논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민주화의 길」은 민주화 열망을 수렴하는 광장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정확한 정세 분석입니다. 기본적인 정보의 결핍과 왜전 때문에 우리 주변은 주먹구구식의 판단이만 연하여 있습니다. 사실의 집적만으로 과학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실의 확인이야말로 올바른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세째, 우리 내부의 동질성 확보입니다. 우리 내부의 분열이나 갈등은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 때문에 일어납니다. 정보와 의견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면 우리 내부에 인식의 동질성은 확보될 것이고 더 나아가 실천의 방향을 일치시키기도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네째,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관제언론에 의해 가리워졌지만 특히 민주화 운동에 의미있는 사건을 힘닿는 대로 알릴 것입니다.

다섯째, 다른 운동권과의 연대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른 운동권의 소식은 물론, 지면을 할애하여 제언을 실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직 미숙한 점도 있고 갖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민주화의 길」은 관제언론이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이 어둠을 뚫고 민주화 운동의 앞길을 열어 가는 햇불로서 대중 언론으로서의 깃발을 높이 들 것입니다.

자유-생존-평화

늦봄 문익환

지금 자유는 지하에서 울고 있다. 위장된 사이비 자유에 밀려나 빈들에서 울고 있다. 자유의 불평등은 자유를 가진 몇 사람, 가진 몇 나라의 전유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자유는 민중의 자유를 짓밟는 군화의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루하루의 생존과 대결해야 하는 민중에게 자유는 그림의 떡이 되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유 같은 건 얼마든지 던져 버릴 수 있는 사치물이 된 것이다. 자유는 못 가진 민중에게는 차라리 외면하고 싶은 저주스러운 것이 된 것이다.

자유가 이렇게 신앙을 잃으면 민주주의도 일대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다. 민주주의가 가진 자들의 지배 이 대울로기가 되고 말면, 못 가진 자들은 살 길을 민주주의 아닌 딴 데서 찾을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계 인류의 문제요 고민이다.

길은 어디 있는가? 자유를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어디에 길이 있는가? 없다. 절대로 없다. 우리의 과제는 위장된 거짓 자유의 횡포에 짓눌려 죽어 가는 민중의 자유를 되살리는 일이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자유가 곧 빵이요 생존이라는 걸 경험해서 아는 민족이다. 자유는 그림의 떡도 아니요 군화의 장식품도 아니다. 그것이 곧 생존의 기본 조건이다.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은 곧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생존권의 주장은 자유의 주장일 수밖에 없다.

자유를 생존권의 포리일체로서 되살리는 일은 우리의 세계사적인 사명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또한 실추된 민주주의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생존권의 회복을 자유와 민주주의에서 찾는다면, 생존권의 보장은 평화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생존권은 온갖 유형무형의 폭력과 핵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된 한반도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다. 남과 북의 집권자들은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불장난을 할지 모른다. 강대국들은 자체의 이권 수호를 위해서라면 한국민의 희생쯤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심지는 양쪽으로 타들어 가고 있다. 타들어 가는 이 심지를 때버리는 일이 급선무다. 그것이 곧 긴장 완화요 분단 극복이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대다수 국민 곧 민중의 소원이 존중되고 이를 성취하는 제도가 민주주의라면 평화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민중은 폭력과 전쟁으로 지켜야 할 기득권도 그럴 힘도 없기 때문이다. 민중은 소수 지배자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총알받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평화야말로 민중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룩하려는 이 나라의 '민주화'는 죽어 가는 자유를 되살리는 일이고 이 겨레가 살아남는 일이다. 우리가 대대로 평화를 누리는 일이고,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되는 일이다.

자유 만세!
민주주의 만세!
평화 만세!

아아 모두들 여기 모였구나

申庚林

불길을 헤치고 물 속을 헤엄치고
가시밭 들무덤 바위산을 뚫고서
모두들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노래 크게 외쳐 부르면서

모두들 손에 손잡고 싶구나
저 강 건너 동녘을 향하여
새 햇살 새별빛 아직 멀어도
잃을 것이 없는 자에겐 두려움이
없으니 망설임도 없으니

등에는 깊은 잇발 자국
이마와 손바닥엔 아직 피 붉은 채
모두들 여기 모였구나
끝내 흔들리지 않을 깃발
저 하늘 높이 세우기 위하여

손과 발에 매인 사슬 끊어 던져라
아양과 눈웃음에 우린 속지 않는다
모두들 힘차게 달려가는구나
육천만 온 겨레 열싸안고서
어깨동무 하고 나갈 북소리 울리며

철창에 뜨는 달 먼 산에 피는
아지랑이에 한숨짓기도 했지만
마룻바닥에 이마 대고 울기도 했지만
깊은 절망에 한숨 쉬기도 했지만
모두들 주먹 다시 부르짖는구나
어둠 이 땅 구석구석에서 몰아낼
큰 햇불 드높이 밝히려라고

이제 우리 갈 길을 알았노라고
이웃과 함께 친구와 함께
갈갈이 찢긴 이 땅덩어리와 함께
밝히고 꺾이고 으깨어져
조그맣게 움츠러든 이 겨레와 함께
이제 갈 길을 알았노라고
아아 모두들 여기 모였구나



한반도 주변정세와 한국의 정치, 경제

I. 머릿말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 소련의 극동군사력의 증강,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시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은 한국인의 이해와 식적적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해방 이래 한국의 상황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규정받아 왔다. 그 까닭은 한반도는 주변국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정세 특히 미국의 세계전략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자주성을 상실한 채 대외종속성을 심화시키고 내적 구조의 파행성을 가져오고 있는 한국의 경제 및 정치구조의 본질을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신냉전체제의 성립

(1)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위기

2차대전의 종료와 함께 냉전체제를 기초로 편성되었던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체제는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첫째 베트남전에서의 실패 둘째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의 고조 세계 세계자본주의 전반의 불황국면의 시작과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힘의 열세를 인식한 미국은 전반적인 체제개편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내용으로서 동맹국의 강화, 동맹권의 확대 및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에의 적극개입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었다.

(2) 신냉전체제의 성립

과거 냉전체제는 미·소를 양극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닉슨이후 진행된 신냉전체제는 구식민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축소와 서유럽과 일본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의 상대적지위 저하와 중·소대립으로 표면화된 사회주의권의 분열 등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성립하였다. 즉 미·소 양국을 미·중·일·소 4국 체제로 전환시켜 4국간의 이해조정 및 힘의 균형에 의해 국제적 분쟁을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중공을 동맹권내로 끌어들이어 반소형 지역통합방식을 진행시켰다. 이와 함께 소련의 군사력 확장에 맞서 군국주의적 세계정세 즉 군비확장, 핵강화 및 유럽등지에 중거리

핵배치 등도 강행하여 나갔다.

(3) 미국의 세계 전략

오일쇼크 등에 의한 세계 자본주의의 전반적 불황의 심화, 베트남전 개입의 실패, 이란 팔레비 정권의 붕괴와 같은 상황변화에 의해 미국의 세계전략은 변화를 강요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통해 현 「신냉전체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70년대 초 미국의 세계전략은 「닉슨독트린」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서의 미국 군사력의 축소와 중공에의 접근,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간접개입으로의 전화 등을 기본정책으로 하면서 친미적 동맹국의 군사력보강과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부담전가로 구체화되었다.

그 후, 미군 축소에 따른 미국에 대한 불신감 증대, 구식민지 해방에 따른 미국세력권의 축소 등으로 인해 다시 1975년 12월 포드의 신태평양 독트린으로 수정되었다. 이 독트린은 지역적 통합체제로서의 일본의 위치를 크게 부각시켰다. 이것은 닉슨 독트린이후 수행되어 오던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을 더욱 공고히 했다.

1975년 인도차이나의 공산화이후 보수주의로 회귀하던 미국에는 미·소협조, 인권의교를 들고 나온 카터가 등장했다. 그러나 78년에 이란 팔레비왕조의 붕괴 후 그 한계를 드러내어 일본의 재무장과 중공과의 동맹관계 수립 및 이를 통한 지역통합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신냉전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란혁명과 소련세력권의 확대(아프가니스탄 침공,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자 초보수파 레이건이 등장하여 신냉전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스윙전략(소련이 서유럽이나 페르시아만 지역에 침공했을 경우 극동주둔 미군병력을 그 쪽으로 옮긴다는 전략)에서 동시다발보복전략(같은 경우 베트남과 북한, 그리고 소련해안 지역을 공격한다는 전략)으로의 전환과 함께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구상되었다.

III.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

(1)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에 따라 대 동북아정책도 변화하였다. 닉슨은 미군철수를, 포드는 남한을 태평양신방위선으로의 포함을, 카터는 주한 미군 철수 대폭축소 및 한미합동 군사훈련(팀스피리트 78~84)을, 레이건은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구상 등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는 두가지 기본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 의미에서 한반도 및 극동지역은 페르시아만 유사시 소련의 개입을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의미에서는 최근 이 지역에서 소련의 군사력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의 대소전략의 최전선으로서 소련 및 소련의 동맹국의 군사행동에 이를 부력화하고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미국의 대 동북아정책은 일본의 재무장과 중공과의 동맹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소련의 극동지역 해배치 강화에 대응하여 한반도 내에 핵무기를 배치하게 되었다.

2)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는 1963년 「미쓰야(三矢) 계획」이라는 한반도개입모의 도상훈련에서 시작하여 70년 나카소네 방위청장관의 발언에서 표면화되었다. 당시 나카소네 발언 내용 중에는 1. 한반도사태시에 일본내 미 군사기지 사용에 언제나 동의 2. 동·서·남해안과 대한해협의 해상봉쇄임무를 일본이 수행 3. 북한의 선제공격시 유엔군이 파견되면 일본군도 이에 참여 4. 그 밖의 사태라도 미군이 작전하게 되면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일본군대 상륙가능 5. 남한내의 일본인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가해진다고 판단될 때 그보호를 위해 일본군대 상륙 등이 들어 있어 실질적인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이나 다름이 없다.

더구나 일본은 군사대국으로의 길을 나아가고 있다. 방위비 1%제한 철폐, 일본열도의 불침항모론, 소련잠수함에 대한 대한해협봉쇄발언 및 해상교통로 1천해리 방위역할 표명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재무장이 활발해 지고 있다.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는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군사적 의존을 고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IV. 한국 경제의 현실

이제 신냉전체제 하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누구나 알고 있듯이 70년대까지의 한국경제는 외자의존적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에 따라 경제성장을 추구해 온 결과, 자본·원자재·기술·시장 등에 있어서의 대외종속성 및 산업간·기업간·지역간·계층간의 파행성이 심화 확대되었다. 그 모순의 폭발이 경제적으로는 80년에 있었던 재생산 과정의 과국이며, 정치적으로는 유신체제의 자멸이었다.

따라서 새로이 성립한 제5공화국의 경제적 과제는 대외종속성의 탈피와 경제적 불균형의 극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방경제 체제」와 「민간주도형 경제의 확립」을 내걸고 건축정책, 중화학 공업 투자의 재조정, 수입자유화, 은행의 민영화, 6·28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7·3 금융 거래 실명제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 왔다.

그러면 이후 한국경제를 83년 후반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무역의 경우, 1981년 국민총생산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43.4%이며 수입의존도는 51.6%로 국

내산업과 분업관련을 갖지 않는 수출로 인해 수입은 더욱 늘어나고 무역수지 적자는 1982년 현재 25억 달러에 이르렀다. 무역수지 적자와 무역외수지 적자를 합한 경상수지 적자의 증가는 결국 외채의 증가를 가져오고 외채의 증가는 다시 경상수지 적자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은 조금도 식감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외채의 악순환은 1. 외국자본의 유입이 감소되어 더 이상 외자도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경제성장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외채 상환 압박 2. 선진국 불황으로 인한 수출 부진 현상 3. 70년대 제3세계권의 수입대체공업의 성장에 따른 공업제품과 반제품 수출시장 축소 등으로 선진국의 구조적 불황이 제3세계로 전가된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고도자본주의 국가와 개발도상국 사이의 모순은 개발도상국의 수출 상품이 갖는 한계성이 명확해지는 불황기에 외채 상환 문제 등으로 표면화한다. 1983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의 외채 상환 거부는 이 같은 구조적 모순에 대해 개발도상국이 취한 저항의 한 형태이며, 이 피해는 다시 한국 등 다른 개발도상국의 외자도입 조건의 악화로 나타난다.

그 결과 1983년 말 현재 외채 총액은 401억 달러에 이르러 세계 4위를 기록했다. 또 금년 말에는 426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마저 있었다. 더구나 국민총생산에 대한 외채의 비중이 72년의 35%에서 82년에는 56.5%로 확대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외채 잔액 중 단기외채의 비중이 72년 16.7%에서 82년 27.6%로 증가하여 채무구조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것은 82년의 경우 46억 7천만 달러의 외채를 도입하여 그 중 44억 2천만 달러를 원리금 상환에 충당함으로써 단기외채 중 외채상환율이 70년대 평균 34%에서 95%이상으로 높아진 것을 봐도 명확히 드러난다. 게다가 정부는 원리금 상환액이 83년에는 60억 달러, 84년에는 70억 달러, 83년에는 77억 달러, 86년에는 85억 달러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외채 부담이 가중되고 차관 도입이 어려워질 전망이 보이자, 정부는 외국은행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로 은행과 보험회사, 증권회사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외국자본의 경우, 3백만달러 이하의 소액은 신고만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원금 회수에 관한 제한도 전면 철폐했으며, 내국세 5년간 완전면제와 그 후 3년간 50%감면등의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또 레이건 방한을 계기로 84년부터 화장품, 카펫, 냉장고를 비롯한 31개 품목의 수입을 개방하기로 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로써 수입자유화율은 80.4%에서 85%로 상승하게 된다.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입개방과 구매사절단 파견 등으로 수입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보다 국내 중소기업의 기반을 붕괴시킨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역기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독점재벌은 정부의 특혜 지원 속에서 생산과

정과 유통과정을 통해 초과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외국자본의 한국경제 지배와 독점 대기업의 수탈 하에서 평균이윤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여 점차 왜소화하거나 몰락하고 있다. 특히 장영자 사건, 명성 사건 등 권력을 등에 업은 대규모 금융 부조리는 83년 말 엄청난 규모의 중소기업 도산을 낳았고 동시에 통화팽창에 따른 비생산적 인플레이를 가져왔다. 자기 자본비율은 불과 12.55%인 30대 재벌이 82년 은행 총여신 61조 1백 38억원 중에서 43.2%인 26조 3천 3백 66억 원을 차지하고 이들 30대 재벌의 부동산이 3조원에 이른다는 것은 은행 민영화 이후 재벌들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온 국민을 실의에 빠뜨리게 한다.

또 2백만 농가의 실태는 어떠한가? 농민들은 국가의 빚막고도 83년 7월 현재 가구당 170만원의 빚을 지고 있어 82년 95만원보다 훨씬 많아졌다. 71년에는 농가 부채 비율이 75.7%이던 것이 83년에는 89.6%로 증가했으며, 소작농의 증가도 놀라와 60년의 26.4%에서 70년에는 33.5%, 82년에는 46.6%로 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83년 추곡수매가를 동결하였다. 3.5%의 농가구입 상품가 상승과 교통비·교육비의 증가 속에서 강행되는 수매가 동결은 농민을 도시의 빈민굴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 결국 지난 18년간 식량자급률은 42%나 떨어져 52%에 불과하며, 이는 식량 수입에 따른 외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전체 노동자의 69%인 438만명은 월 10만원도 못 되는 보수를 받으며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 4단체와 한국경영자협회는 84년 임금율 호봉 조정선에서 동결한다고 발표하면서, 도매물가 상승율이 -1.0%이고 호봉에 의한 임금 상승은 평균 3%이므로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연평균 노동생산성 9.8%에도 미달되는 임금상승율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각종 직업병으로 몸은 병들고 일 년에 직업사고로 죽는 사람만도 천여 명을 헤아리고 산업재해로 중상을 입은 사람 수가 10만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의 인권과 이익을 보장할 자유노조운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위 블랙리스트에 오른 천여명의 해고 근로자들은 재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거리를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8.6%인상, 전 땅값 12.1%의 상승, 수업료 인상 등을 생각하면 대다수 국민의 물가 압박은 큰 것이다. 식비가 늘고 월세가 오르고 등숙금이 오르는데도 물가상승률은 0%다. 물가지수의 허구와 각종 금융 부조리와 부동산 투기 속에서 민중은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삶마저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의 「82년도 도시가계연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층소득자는 적자폭이 1만 6천으로 81년의 9천 7백원에 비해 60%나 늘었다. 반면 최상위 20%는 월평균 15만 5천원의 후자가계를 영위한다. 이 같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는 전세나 식비 등 기본생계비 부담의 증가를 저소득층의 소득증가가 쫓지 못하기 때문

이다. 그런데도 저소득층의 담세율은 높아지고 10억 이상 고액채납자가 30명이나 되며 그 합계는 1천 1백 73억원에 이른다.

이렇듯 우리 경제의 목표인 「자립경제」와 「경제적 평등」은 도외시된 채 부문간 특히 계층간 불균등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대외중독성과 내부적 왜곡이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V. 한국 정치 상황

80년 5·17이후 정국이 극도로 경색된 상태하에서 현 정치구조를 형성한 제5공화국은 정치피규제자, 제적학생, 해직교수, 해직언론인, 해직근로자, 민주적 양심수 등을 체제 밖에 남겨놓은 채 정치 일정을 진행시켜 나갔다. 이로 인해 대다수 국민은 현 정권의 민주성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었고, 민주세력은 끊임없는 민주화 요구를 제기해 왔다. 광주사태라는 집권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 정권은 자체에 결여되어 있는 통치의 정당성을 해외에 의존해야 했다. 이러한 의존이 수많은 댓가를 지불해야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은 레이전방한 이후의 시장개방 등 수많은 양보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선거 및 한반도 주변의 상황 변화가 득이나 정당성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현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겨 주고 있으며 여기에 국내적으로 선거가 다가 오며 따라 현 정권은 정당성 확보라는 절박한 과제에 쫓기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현 정권은 83년 초부터 서서히 형식적 민주주의의 체스처를 보이기 시작했다. 83년 2월의 피규제자 해금을 필두로 83년 말에는 부교조치를 발표하였고 금년 2월에는 2차해금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자체의 한계에서 나온 걸치레뿐인 화합 조치이고 따라서 기만적인 것일 수밖에 없음은 위와 같은 배경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실제 행태에서도 알 수 있다.

거리를 확보하며 국민에 대해 불심검문을 자행하는 전 투경찰과 '이상한 소문'이 나돌 때마다 민주인사나 민주청년, 학생, 노동자들을 감시 미행하며 때로는 영장없이 연금이나 구금을 일삼는 기관원, 사복경찰들은 논외로 치자. 아직 민주화를 가로막는 언론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법, 사회보호법, 선거법 등 구악법들이 존재하고 있다. 해직교수의 복직도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해직언론인들은 여전히 일터를 잃은 상태이고 해직근로자들은 소위 「블랙리스트」에 의해 생계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해금조치만 보더라도(사실 정치의 규제 피규제란 국민만이 판단할 수 있으며 한 정권이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2차 해금조치 이후에도 아직 99명의 중량급인사가 규제되어 있다. 이들이 해금될 경우 기존의 제도권 정치질서는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기존의 정치관도는 크게 변화하고 만다. 정당성을 결여하고 물리적 폭력만으로 통치해 오던 현 정권이 이 변화될 정치관도를 풀어 나갈 정치력을 가지지 못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며, 이것이 선거에

의할 나답요하는 현 정권에 치명적인 것이다. 해금과 다음 해금간의 사의적 기간설정과 해금인원을 뒤엎힌 이유도 없이 고부술 늘었다 줄었다 하듯 국민의 판단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바로 현 정권의 자신감 결여 때문이다.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이들이 민주세력에 동참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분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 정권의 대학정책에 대해서도 살펴 보기로 하자. 권 문교장관은 부교조치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대학정책은 구속이 아닌 선도로 전환할 것과 학원의 자율성을 약속하였다. 즉, 학원사태는 학원자체의 문제이니 학원에서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원사태가 학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 20년간의 학생운동이 증명한다. 학원의 자율성이란 사회 각 부분의 자율성이 전체가 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정당의 자율성, 언론의 자율성, 노조의 자율성, 농협의 자율성, 행정의 자율성, 경찰의 자율성 등을 거론하지 않고 학원의 자율성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시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치의 부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언론이 완전히 통제된 상황에서 진실을 외쳤던 데 지니지 않는다. 학생대모를 일부 과격학생의 불순행위로 몰아치기 이전에 이러한 상황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한편 83년 8월부터 12월까지 숙청 「야림」으로 불리우는 「야학연합회」사건이 있었다.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200여명의 학생에게서 한명도 빠짐없이 좌경사상의 소지와 유포에 대한 반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받아 내었다.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근로청소년의 학구열을 충족시키려는 학생들을, 일제시부터 존재해 오던 야학을 불온시하기 이전에 과연 노조의 자율성이 존재하는가, 우리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깊이 자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원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학원만이 그래도 타율을 거부하는 가장 자율적인 곳임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정부의 새로운 대학정책은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학생운동을 종래와 같은 탄압정책으로 막기에는 한계를 느낀 데서 나온 것으로 학원 사태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시키고 또 다시 학원에 개입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는 것일 따름이다.

정부의 국민화합조치가 얼마나 허구적인가 하는 점은 또한 이영희, 강만길, 조승현씨 구속, 석방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2자, 3자, 4자, 6자 등 건피를 잡을 수 없는 애기들이 둘러올 즈음이던 12월30일 세분이 복귀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구속 45일만인 2월 14일 잘못을 뉘우쳤다는 명목으로 석방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세분이 석방을 조건으로 인터뷰를 위해 당국이 작성한 반성문을 의도록 강요당한 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이 사건과정에서 야기된 사전 언론재판, 영장없는 불법연행수사, 학문연구의 침해 등 이외에도 통일정책은 정부만이 논의할 수 있다는 독점선언에는 경악을 금치 않

을 수 있다.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민주화운동의 목표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에 있음을 인식할 때 통일논의의 민주화를 봉쇄하려는 것은 민주화의 가장 본질적인 면을 제거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현정권의 기만적 화합조치를 목과하면서 민주세력들은 계속적으로 결집해 가고 있다. 우선 83년 5월의 김영삼씨 단식사건이 있었고 83년 8월 15일 김대중, 김영삼 양씨의 공동성명이 있었으며 83년 11월에는 재야인사 47인이 레이전방향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고 금년 2월에는 재야인사 37인이 사회전반의 민주화를 천명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교회청년들은 예정청년선교대회를 시발로 점차 자체 역량을 정비하고 있다. 83년 12월 과거 70년대 민주노조운동들을 위해 투쟁해 왔던 노동자들은 노동자복지회를 창립하였으며 원풍노조의 해고근로자들은 회보인 「원풍소식」을 창간하였다. 태창메리야스 근로자 해고 사건을 계기로 이리와 인천지역의 근로자들은 블랙리스트 철폐운동을 촉발시켰다. 한편 농민들은 농협민주화 백만인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부분적인 성과를 쟁취하였다. 5·17 이후의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 이제 노동자, 농민, 재야, 교회, 청년, 지식인, 문화인 등 사회 각 부분의 민주화운동세력들은 투쟁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상의 한국정치상황 검토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을 수 있다.

1. 현 정권은 3년간의 폭압정치에 한계를 느끼고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일정한 정도의 형식적 민주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2. 이러한 형식적 민주화를 통해 기만적으로 국민적 이미지를 바꾸고 민주세력의 단합을 구조적으로 봉쇄하려고 한다.
3. 그러나 민주세력은 형식적 민주화의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폭로하면서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을 위해 끊임없이 연대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VI. 맺음말

지금까지의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정세 검토과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당면과제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동맹관계가 강화되면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 민족의 운명과 장래가 결정될 것임을 인식하고 정치적·경제적 자주성을 획득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땅의 민주화는 민족 안보의 기초가 되는 자주성 확보에 필수적 요건이고 자립경제야말로 이를 실제화하는 방법이다.

둘째,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민주적 민주적 요구가 묵살될 수 있고 결국 사회의 안정성을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사회의 구현이 절대적인 요건이며, 이를 위한 민주화운동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학 원

● 황정하군 추락사 사건

지난해 11월 8일 서울대학교 교내 시위중 도서관 6층 창문을 통해 바깥을 타고 5층 난간으로 내려오던 황정하군이 기관원 10여 명의 과잉 제지로 추락, 뇌골절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기관원들은 황정하군의 생명은 도외시한 채 학생들의 접근 제지와 동료 시위 주동 학생들의 체포에만 급급했다. 11월 9일자 한국일보에 황정하군의 추락 사건을 '관계관의 제지를 뿌리치려다'로 보도했다가 이튿날 즉시 '본인의 실수로 추락, 중태'라고 정정 기사를 게재하였다. 결국 11월 16일 오전 11시 22분 황정하군은 숨을 거두었으며 그의 시신은 사망한 지 불과 6시간만에 화장되어 가족들에게 돌아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날이 갈수록 그도를 더해가는 학원 사찰요원들의 과잉 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의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학생들로는 1981년 연세대 시위중 떨어져 아직도 입원중인 양경희 양, 6월 23일 동국대 시위중 오른팔 등맥이 끊어진 유재건군, 9월 15일 외대 시위중 걸을 수조차 없게 된 이경우 양, 9월 16일 연세대에서 시위중 하반신 불수가 된 김문경군, 10월 6일 인학대 시위중 중상을 입은 윤호영군, 11월 2일 성균관대 시위중 척추골절상을 입은 한덕근군 등이 있다.

● 가두시위

지난해 9월 30일과 11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대학생들의 연합 가두시위가 있었다. 9월 30일엔 'IPU 악용 말자', '무능 국회 비판한다' 등의 이유로 종로·방산시장·신촌 로터리 일대에서, 11월 11일엔 미국의 인권 정책에 대한 항의로 '레이건 미대통령 방한 반대'를 이유로 내걸고 종로 3가·청량리역 앞·경희대 앞·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외에도 각 대학별로 격렬한 시위가 교문을 뚫고 가두로 진출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다.

● 북교 조치와 제적학생들의 동향

지난해 12월 21일 정부는 권이혁 문교부 장관을 통해 전국대학총학생회에서의 '국민화합'이란 명분 아래 5.17 이후 정치적 이유로 제적된 1,363명에 대한 북교 허용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재경 13개 대학 제적학생들은 1월 4일 '1. 학생운동은 일부 과격 학생들의 소수 활동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대다수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2. 학원과 사회의 민주화가 북교의 선결 조건이다. 3. 일할 권리를 빼앗긴 모든 사람들은 그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4.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

처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어 북교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대학별로 제적학생 총회를 가졌으며(서울대 1.14, 성대 1.21, 이대 1.23, 숙대 1.25, 고대 1.28, 연대 2.6 등) 1월 25일에는 여의도 성당에서 22개 대학대표가 모인 가운데 경인지구 제적학생 북교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위원장: 서원기(고대), 부위원장: 이우재(서울대)).

그러나 정부는 처음의 전면 북교 허용 조치 발표와는 달리 재입학 형식의 선별 북교, 반성문이나 각서 등의 형식을 요구하고, 1.26일 이현재 서울대총장의 기자회견을 선두로 신문방송을 통해 일제히 제적학생들의 움직임을 '일부 과격 과격 학생들의 정치적 선동'으로 몰아붙였다. 이에 제적학생들은 집단적 항의를 하였으며, 연대 제적학생 총회에서는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연대 제적생 4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월 11일에는 제적생 북교추진 대표자 전국협의회가 구성되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으며, 18일에는 경인지구 제적학생총회가 300여 명의 제적생 및 학부모가 모인 가운데 고려대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 '누가 우리의 북교를 가로막고 있는가'에서는 문교당국, 경찰, 언론, 대학당국의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태도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개적인 대화의 광장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수백명의 사복 경찰과 정체불명의 요원들에 의해 의장 서원기씨를 비롯한 19명이 강제연행되고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성북경찰서로 찾아가 50여 명도 함께 연행되어 신원 확인 및 진술서·피의자 심문 조서를 강요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측은 폭력을 휘둘러 이 중 1명이 팔에 골절상까지 당했으나, 성북서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조사만 작성하면 석방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제적생들은 폭력 문제를 석방 후 다시 거론키로 하고 조사 작성에 응해 19일 오후 6시 30분경 개별 훈방되었다.

20일에는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와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개토론회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장소 폐쇄로 들어가지 못하고 난간에서 다음날 7시까지 140여명이 철야농성을 하였다. 여기서 성북경찰서가 자행한 구타, 폭언, 폭행전에 관한 진상 규명과 경찰서장의 공개사과 및 관련자의 인책을 요구하고 정당한 대화 노력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지도휴학 및 강제정집 철폐를 요구하고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성대 이운성군을 비롯한 7명의 사인(死因) 규명 및 추모식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 야학연합회 사건

지난해 8월 27일경부터 주요 야학 교사들이 불법강제연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야학 교사와 관련 대학생 300여명, 노동자 200여명, 기타 다수의 성직자 현장

노동운동가들이 관련된 소위 '야학연합회' 사건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명이 강제연행 수사되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12월 11일 서울 시내 18개 야학팀은 야학문제대책위원회를 열고 '민주야학운동을 밝힌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이들은 이번 사건이 민주적 야학운동을 좌경 사회주의운동으로 매도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당국이 불법장기연금과 폭력수사로 만들어낸 관세 사회주의 조작 사건임을 폭로하고 민주·민족의 이름으로 고발, 더 나아가 민주야학운동의 가치를 높이 들 것을 선언하였다.

즉 '야학은 민주와 민중 복지 실현을 위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비인간적 대우 그러면서도 당국의 미온적 대책과 노동자의 주체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부족 속에서 시달리는 700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서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1982년 3월말 서울시 10여개 주요 야학 교사들로 야학간 협의연구 모임을 만들었음을 밝히고 이 모임은 야학의 질적 발전 및 확산을 위한 것이며 중앙위원 등 야학 교사들이 사회주의 단계적 혁명 노선에 입각하여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며 노동계급의 역할 축적과 조직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반국가 조직이라는 당국의 주장은 명백히 계산된 의도하에 조직된 것임을 폭로하였다.

소위 '야학연합회'라는 것이 야학운동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내용 및 운영의 충실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야학 교사들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모임이며, 실제조직이라면 있어야 할 강령이나 조직원칙도 없는 그야말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회복과 인권향상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한 표현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탄압하고 있는 당국의 저의는 기본적으로 현권력의 비민주성과 반민중성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 '1. 일체의 야학 탄압과 현재도 계속 확대 진행중인 소위 '순화교육' 명분의 불법강제연행을 즉각 중지하고 인권유린을 공개사과할 것과 2. 야학 교사들은 추가연행을 보이콧하고 그래도 불법연행시 범민주운동권의 지지 속에 전체 야학운동 차원에 철저한 민주수호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동시에 야학노동자들도 적극 동참할 것 3. 교회 성직자들의 적극 지지를 확신하며 각교회마다 야학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이며 4.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야학운동에 대한 보다 깊은 지지와 참여를 촉구하고 5. 야학운동은 결코 사회주의 운동일 수 없는 민족사적 전통으로 이어내려온 민주적 민중운동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간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보다 철저한 노력으로 야학운동을 발전시키고 확대 지속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노동

● 이리, 인천 지역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과 블랙리스트 철폐 운동

지난 83년 12월에 이리와 인천에서는 과거 민주노동운동을 꾀했다는 기구로 거머채려 해고당당한 해고 노동자들이 블랙리스트 철폐와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다가 급기야는 삼육까지 가는 시위가 벌어진 일이 있었다.

소위 블랙리스트란 70년대 민주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노동자들, 산업선교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 산업장에서 정당한 요구를 하다가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의 명단이다. 민주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려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 단위사업장 혹은 노동관계기관 등에 배포된 민주노동 운동자들에 대한 요시할 명단으로 이 블랙리스트에 의해 5.17이후 정해, 해고, 투옥, 감시 등으로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오면서도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시간, 산업재해, 노동악법 등으로부터 동료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열악한 생산 현장에서 애써 버티면서 의연히 싸워오던 1000여명의 민주노동운동자들은 가는 곳마다 감시의 눈총을 받아 왔으며 수차례씩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이 악마와 같은 블랙리스트에 의하여 최고 7번까지 해고를 당한 해고 노동자도 있다. 말이 7번이지, 7번씩이나 쫓겨난 노동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래야 물러설 땅이 없었기에 지난 83년 12월에 피눈물나는 블랙리스트 철폐를 요구하며 복직 투쟁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1. 전북 이리의 태창 메리야스 해고 노동자들의 경우

82년 8월 3일 전북 이리에 소재하고 있는 태창메리야스에서 가톨릭 노동 청년회(J.O.C) 회원이라는 이유로 조합간부 박복실 외 9명이 부당해고 당했다. 이들은 취업하는 회사마다 블랙리스트에 걸려 쫓겨나기를 거듭하다가 83년 7월 7일부터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이에 전주 교구 및 전체 교회가 여러 차례 기도회를 열기도 하고 갖은 힘을 썼지만 기업주와 당국은 속임수만 되풀이하였다. 김덕순자매는 이리공단 외 아세아 스와니(일본인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7월 20일 회사는 김덕순자매에게 가노청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며 해고시켰다. 이에 태창 해고자들이 11월 25일 부당해고 진정을 하러 노동부 이리 지방사무소로 갔다가 근로감독관 책상 위에 버젓이 J.O.C 회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명단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대외비비용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태창해고자들은 21일 이리 지방사무소로 다시 찾아가 항의하다가 12월 6일부터 블랙리스트 철폐와 자유로운 취업 보장을 요구하며 철야단식

에 늘어갔고 이에 J.O.C 전국 정의회는 이 사건이 몇몇 노동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J.O.C 회원 전체에 대한 문제이며 100만 노동자들의 생존권 침해 문제라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탄압대책위원회를 결성, 12월 15일부터 서울 정의평화위원회 사무실에 각 교구대표들이 모여

1. 정부는 J.O.C에 대한 종교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1. 태향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당국 및 회사의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라.

1. 정부는 부당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블랙리스트를 철폐하라.

1. 정부는 임금 억제 정책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하루빨리 실시하라.

1. 노동악법을 개정하라.

1. 언론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노동 문제를 공정하게 보도하라'는 요구사항을 내걸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 10일간 단식을 하고 12월 24일 단식을 풀었다. 그후 1월달에 전주교구청에서 태향 해고자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전주교구 전 성당에서 있었다.

(2). 인천지역 해고노동자들의 경우

83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수많은 노동자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생존권을 위협해 온 소위 블랙리스트에 의해 김용자, 김옥섭(태평특수 섬유), 서기화(삼익가구), 신정희(신도실업) 등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 이들 중 김용자, 김옥섭은 1978년 동일방직에서 민주노동조합을 위해 싸우다가 해고당한 노동자로서 김용자의 경우는 특히 먹고 살기 위하여 봉제공장 시다, 미싱사, 버스 안내양, 합판공장, 방직공장 등을 전전하며 7차례나 노동자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해고의 쓴 잔을 마셨다. 이 모두가 블랙리스트에 의해 자행된 부당해고였다.

이와같이 해고된 4명의 노동자들은 노동부 인천 지방 사무소에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 신청과 진정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려고 하였으나 두달이 넘도록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었다. 기다리다 지친 이들은 83. 12. 16일 노동부 인천 지방 사무소 근로감독관실에서 부직과 블랙리스트 철폐를 요구하며 철야농성과 단식을 하다 인천경찰서로 연행되어 17일 풀려났다. 12월 19일 10시 김용자, 김옥섭, 신정희, 서기화, 안순애, 김복자 6인은 다시 노동부로 항의하러 갔으나 직원들과 근로감독관들이 문앞에서 제지를 하여 실랑이가 벌어졌고 20여명이 넘는 노동부 직원과 사복 경찰들은 해고자들의 목살을 잡고 목을 누르기도 하는 등 무자비한 행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서기화씨는 유리파편에 오른쪽 다리 및 힘줄, 혈관이 절단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6명을 12월 20일자로 폭력혐의로 구속하였다. 폭력의 피해자가 노동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폭력범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등 13개 단체에서는 12월 26일 '부당하게 구속된 6명의 노동자들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은 전원 복직되고 블랙리스트는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유일한 배움터인 야학의 탄압은 중지되어야 한다' '권력은 노동자에게 가한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는 요구사항을 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도회를 가졌으며 그 자리에서 블랙리스트(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을 위한 명부) 철폐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84. 1. 19일 문익환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주노동운동자 블랙리스트 문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서는 1월 20일부터 구속된 해고노동자를 위한 금요기도회를 시작했다. 이와 같은 사회 각계각층의 움직임에 당황한 정부당국은 2월 1일 이들 6명의 부당해고 노동자들을 구속집행정지로 석방하기에 이르렀으며, 석방 과정에서 이들에게 블랙리스트 철폐와 원래 사업장으로의 복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부당국은 이리와 인천지역도 부당해고 노동자들을 포함한 1000여 해고노동자들에게 국민화합이란 허울좋은 미명아래 복직이 아닌 재취업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6명의 인천해고노동자들에게는 재취업을 하지 않고 복직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구속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았다. 이에 가톨릭노동청년회는 1000여 해고노동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요구가 재취업이 아닌 조건없는 복직임을 명백히 하였고 인천 해고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현 정권의 노동자 탄압과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왜 구속되었는가
.....

1. 복직의 정당성
우리의 복직은(민주 노동 운동을 하다가 해고된 것이므로) 사회 정의의 실천과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당연한 결과이다. 제척학생들이 자기 학교로의 복교가 당연하듯이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자기 공장으로의 복직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복직을 통한 블랙리스트 폐기 확인을 요구한다. 이는 인천지역 해고노동자뿐 아니라 이태향에리야스, 기타 민주노동운동에 앞장서 온 해고노동자들의 동일한 요구이다. 아울러 현 정권의 평화적정권 교체와 민주발전의 구호를 우리는 복직을 통하여 첫 신호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복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재구속하겠다는 협박은 현 정권의 노동탄압 정책 고수와 무조건적인 굴복의 강요이다.

1. 우리의 결의와 각오
...민주노동운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은 이대로 꺾이고 말 것인가.

그런 수는 없다. 수없이 속아온 허위와 기만 속에 더 이상 한치도 물러설 곳이 없는 우리이다. 재구속을 우려하고 떨고 있을 우리는 아니다. 우리의 복직은 이땅의 민주노동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불꽃임을 확인한다. 이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더라도 절대로 무릎 꿇을 수 없으며 조그만 물방울이 모여 거대한 바

위를 가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복직이 실현될 때까지, 민주노동운동이 보장될 때까지 맞서서 싸울 것이다.

1. 우리의 요구.
• 부당해고된 민주노동운동 해고자의 전원 복직
• 블랙리스트의 완전 폐기
• 노동 관계법의 개정
• 노동부 장관 책임 사퇴

*「원풍소식」 창간

70년대 민주노동운동의 선두에서 줄기차게 투쟁해오다 마지막 민주노조로서 지난 82년 9월 당국의 폭력에 의해 파괴되었던 원풍모방노동조합의 해고근로자들이 다시 한데 모여 83년 12월 1일 회보「원풍소식」을 창간하였다.

「원풍소식」은 매월 1회씩 발간되는데 창간호에는 82년 9월 원풍노조가 파괴될 당시의 상황을 눈물겹도록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창간호에는 또한 노동관계법규를 해설하는 '노동교실' 난과 각 운동권의 소식을 전하는 '소식' 난도 실려있다.

창간호에 이어 1월 1일에는 2호가 2월 1일에는 3호가 계속 발간되었다. 2호, 3호에는 노동자블랙리스트 사건 전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밖에도 노동 문제를 소재로 한 시, 수필, 노래, 관놀이마당극, 만화 등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농 촌

*농협민주화운동

1983년 8월 1일을 기해 한국카톨릭농민회는 농협조합장 선출의 직선제를 목표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카톨릭농민회의 각 지역 지부는 전국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운동에 참가하였다.

'1. 1962년 5. 16 군사정권이 발동한 '조합장 임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농협의 조합장을 정부와 중앙회가 임명하게 됨으로써 농협은 농민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는 무관한 대농민통제기관화되고 농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카농 전남연합회) 2. 이 「임시조치법」의 골지는 민주역량의 부족이라는 미명 아래 2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적용됨으로써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직원을 위한 농협으로 전락하였다. (충남연합회 결의문) 3. 농협민주화운동이 농민의 권익 향상 뿐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첨경임을 깊이 인식하여 모든 양심세력과 사회단체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전남지역협의회). 농협측과 당국의 집요한 방해와 저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83년 11월 16일 「농협민주화선언」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확인하였다. '1.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합장직선제를 통한 농협민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나아간다. 2. 「임시조치법」에 의

해 임명된 조합장은 조합원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3. 각도별 농협민주화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농협민주화를 위한 조합원대회를 개최한다. 4. 농협민주화를 원하는 모든 농민단체와 연대운동을 갖는다.'

100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된 후 제119회 정기 국회에서는 여야합의 하에 「조합장 임명규칙」을 개정키로 의결하였다. 그 내용은 단위조합장 후보를 종래에는 총대회에서 선출한 「9인의 전형위원」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중앙회장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던 것을 전형위원제를 없애고 총대회에서 직접 1인의 후보를 선출하면 중앙회장이 임명토록 한 것이다. 즉, 임명제를 계속 유지하되 간선단계를 하나 줄인 것이다.

이 「부분적 개정조치」에 대해 카톨릭농민회 측은 다음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1. 개정은 작은 변화에 불과하나 지금까지 전개한 서명운동의 결과이다. 2. 그러나 「임시조치법」이 폐기되지 않는 한 농협은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될 수 없다. 3. 이번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조합장직선제 실시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농협민주화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농지세 수세 현물납부 운동

1983년 11월초부터 한국카톨릭농민회에서는 「농지세, 수세 현물납부운동」을 전개하였다. 얼핏 들어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 「운동」의 배경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현재 농지세와 수세(농지개량조합비)는 80kg 1가마니 가격 55970원으로 농가전세수입금을 계산하여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금년 쌀 생산량 총 3750만섬 중 농민자가소비량 1000만섬, 정부수매량 750만섬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섬은 농민 스스로 상품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의 의미도입에 의한 재고미로 인해 실제 농민들이 쌀을 시장에 내다 팔면 40,000~45,000원 밖에 받지 못하여 1가마당 10,000~15,000원을 손해보고 있다. 사채, 농자금의 상환이나 생활비, 교육비, 영농자금 마련 등 현금의 필요에 쫓기는 농민들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에 투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농촌실정이다. 수매량, 수매가 동결, 무분별한 의미도입 등 잘못된 농정과 전반적인 한국농업의 현실이 바로 이 「현물납부운동」의 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83년 11월부터 전남 카톨릭농민회 구례지역협의회에서는 당국에 대해 유인물과 대화를 통해 수세를 현물로 수납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였다. 당국이 이에 대해 아무 반응이 없자 구례지역 4개 마을에서는 경운기를 동원 비를 신고 농지개량조합으로 가 수세를 현물로 자진 납부하려 하였으나 경찰과 공무원의 저지를 받아 하루를 대치하면서 비를 쌓아 둔 채 당국과의 협상을 요구하였다. 당국은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실정이다. 구례지역 농민들은 수세를 현물로 납부할 것을 선언하고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83년 12월 19일 경남 진양군 금산면 관방마을에

서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동민들이 벼를 농지개량조합에 수세로 자진 납부하였다. 관제당국은 이를 거부하였고 회유, 협박으로 일관하다가 마침내는 수세현물납부에 앞장섰던 이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관방마을 농민들은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계속 투쟁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 수세현물납부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자신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상부의 지시 없이는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다.

재야·종교

* 통일문제사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조사연구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던 '통일문제에 관한 교과서 분석' 사업이 진행되던 도중, 1983년 9월 이후 이 사업에 참여했던 9명의 교사들이 치안본부 대공본실에 의해 조사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교사들은 '경교', '주의' 등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약 2개월 후인 1983년 12월 15일부터 31일 사이에 교사들이 재연행되고 연구 자문을 위해 강의를 했던 이영희 교수 강만길 교수 및 이 사업의 주관자인 조승혁 목사가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사태로 사건이 확대되었다.

수사당국은 1월 10일 조승혁 목사, 강만길, 이영희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면서 이들이 초·중·고등학교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상륙회라는 서클에서 아래의 내용을 강의 주입시킴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지지·찬양·고무했다고 발표. 1. 항일투쟁을 한 것은 좌익뿐으로 북한이 민족정통성을 갖는다 2. 6.25는 민족국가 형성 위한 노력이지 침략이 아니다 3. 6.25는 통일의 절호 기회였으나 미군·유엔 개입으로 좌절되었다 4. 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고려연방제가 더 현실적이고 자주적인 통일방안이다 5. 반공교육은 통일의 저해 요인이다 6. 통일 후의 체제는 노동자·농민이 주체가 되는 사회주의체제가 되어야 한다. 7.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교차승인 등 남한의 통일정책은 영구분단을 고 정화시킨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협의회(NCKK)인권위원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84년 1월 5일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1월 6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민족통일의 주체는 국민이며 정부나 특정기관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으며, 1월 11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구속조치와 언론의 일방적 왜곡 보도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월 25일 NCC, 공동대책위원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정의구현사제단은 공동성명을 발표 이 사건을 통일논의의 민주화를 위한 계기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선언. 이 사건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정통성문제와 관련하여 강만길교수는 한민족의 해방을 위해 적극투쟁

했던 민족적 사회주의자들은 해방 후 소련이라는 외세를 업고 등장한 김일성 집단에 의해 철저히 숙청·제거되어 김일성집단에는 민족적 정통성이 없으며 결국 오늘날에 있어 정통성문제는 남과 북 어느 쪽이 민주주의를 더 잘 실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정치학적으로 전쟁이란 한 민족국가와 다른 민족국가 간의 싸움을 뜻하며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은 내란 혹은 동란, 사변 등으로 불리운다. 이영희교수는 1815년의 비엔나회의에서 내려진 전쟁에 관한 고전적 정의에 근거하여 6.25는 전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3. 한민족의 내부적 동란에 외세가 개입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국제관례상의 일반적 견해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유엔이 외국군대인 유엔군을 파견한 것은 국제관례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건임을 지적했던 것이다. 4. 한민족의 자주성과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미군이 한국에 영원히 주둔해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주한미군철수는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직면하고 대비해야 할 과제임을 지적한 것이고 이를 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고려연방제 지지로 몰아세운 것은 왜곡적사이다. 5. 우리의 현실에 반공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동질성을 부인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혹시라도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표명했을 뿐이다. 6. 노동자, 농민 등을 포함한 민중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보편적인 이념의 하나이며 민주주의 정신과 부합한다. 이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후백제의 잔재이다. 7.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교차승인 등은 직접적 의미에서의 통일정책은 아니며 동서공존 내지는 현상유지를 통한 장기적 모색의 사상적 배경이 깔려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러한 정책이 최선의 통일방안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회측은 연구관계자의 연행·수사과정에 몇가지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1. 아직 발표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중인 연구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언론을 통하여 일종의 여론재판, 사전재판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의 출판,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2. 사회적으로 확실한 신분을 가진 분들에 대해 불법연행, 장기 구금수사, 수색영장 없는 가택수색 등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3. 피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세 분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은 세 분의 인격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손상을 미친 행위이다.

검찰은 구속 35일만인 지난 2월 14일 세 분에 공소보류 결정을 내리고 이들이 위법을 인정하고 개전의 정을 나타냄에 따라 석방한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이들의 반성문을 공개하였다.

2월 21일 공동대책위원회는 당국의 석방조치가 대책위원회와 당국 간의 '합의내용을 위약하고 거짓증언을 강요한 것'이라고 하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이 이처럼 왜곡당하기보다

는 차라리 공정한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했다.' 이 세 분은 45일 동안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석방을 조건으로 하여 강제진술 내용을 반복 연습시켜서 이를 마치 자연스러운 석방 인터뷰인 양 여론을 조작하였다.' 우리는 세 분의 정신적 상처가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당국에 대해서는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과 인권침해의 성격을 지닌 공소보류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83년 시국성명

83년 11월 8일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에서는 레이건 방한을 앞두고 다음의 입장을 천명하는 성명을 발표 1.

북소리

작년 하반기에서 현재까지 학원 사태로 인해 총 89건 195명이 구속되었다. 이 중 연대 김문경(9월 16일)군 등을 비롯 3명이 시위 중 크게 부상당했으며, 급기야 11월 8일에는 서울대 황정하군이 경찰의 과잉 제지로 사망했다. 이로서 80년 5월 김의기, 81년 5월 김태훈을 이어 5·17 이후 학생 3명이 목숨을 잃었고, 강제징집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한 상대 이운성군 등 7명이 합치면 사망자만 10명에 이른다. 또한 레이건 방한시에는 11월 9일 오후 11시부터 13일 새벽 5시 30분까지 행사동행 3명, 가택연금 12명, 그리고 145명이 불법연행 구금된 바도 있었다. 한편 수감중인 학생들은 채소와 처우와 부식 개선, 집시법 철폐 등을 골자로 서울과 영등포 구치소, 순천·안양·영등포·부산·춘천·공주·군산 등의 교도소에서 수차에 걸쳐 단식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는 야학 교사와 관련 대학생 300여명, 노동자 200여명, 기타 다수 성적자, 현장 노동 운동가들로 블랙리스트와 조직표를 작성하여 200여명을 연행수사한 일명 '야학연합회'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으며 현재도 계속 수사중이라고 한다.

한편 블랙리스트에 의해 인천 지역의 노동자 부당 해고와 이에 항의한 노동자의 구속사건이 작년 12월에 발생하여 서기화씨 등 6명이 구속되었다가 올해 2월 1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들은 석방시 블랙리스트 철폐와 복직을 약속받았으나, 아직 복직되지 않은 상태이며, 복직을 요구할 경우 재구속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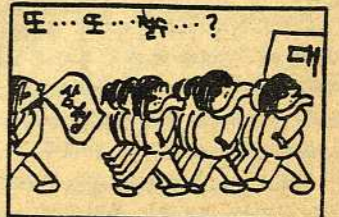
또 통일문제 교과서 분석 연구 관계자들의 불법연행 사건이 작년 9월초에 발생, 현직 교사, 전직 교수, 목사 등 13명이 연행되어 조사받은 후에 이영희교수 강만길교수, 조승혁 목사 등 세 분이 복귀의 주장을 등조

민주노조확립으로 인해 해직된 근로자는 전원 복직되어야 한다. 2. 농협조합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수매가를 보장하라. 3. 노점상단속 등 도시형세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 4. 졸업정원제, 강제군대입영조치는 중지되어야 하며 체적학생, 해직교수는 전원 부활, 복직되어야 한다. 5. 평화적 정권교체를 막는 현행 헌법 및 선거법, 국회정당법, 사회안정법, 집시법, 언론기본법, 사회보호법, 국가보안법 등은 철폐, 개정되어야 한다. 해직언론인은 복직되어야 한다. 6.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체제 혹은 한·일 군사협력체제내에 편입은 거부돼야 하며 한반도 내의 핵무기는 철거되어야 한다.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45일만인 지난 2월 14일 공소보류조치로 석방되었다.

이들은 불법연행 당시 진술을 강요받았으며 언론재판을 당하기도 하였다.

민들이 이야기



— 통일 문제 사건을 보면서 —

얼마 전 전직 대학 교수 두 분과 기독교 목사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북한의 통일노선에 동조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신문 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현직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안을 지지하고 남한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세 분이 그 동안 이 나라 민주화 운동과 민족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해 온몸을 바쳐 신산고난을 겪으면서까지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2자·3자·4자·6자 회담 등 우리로서는 잘 이해하지 못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움직임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이러한 통일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 사건의 귀추를 예의 주시하면서 이것이 주는 대내외적 여파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통일에 대한 모든 구상과 방침이 정권적 차원에서만 배타적으로 독점되고 정부건 정치인이건 학자건 간에 '통일의 주체는 민족 성원 전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받드는 바로 그 민족 성원 개개인의 통일 논의 자체를 불온시하고 금압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통일을 저해하는 비민주적 폭력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부의 정책도 비판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자유가 민주주의 체제에는 있다. 하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말도 있듯이 우리 민족 최대의 관심사이자 과제인 통일이 국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와 국민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통일에 대해서 선부론 의견을 발설했다가 행여나 어디론지 끌려가지나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건전한 민주적 통일 논의를 압살시켜 온 장본인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준다.

6·25이후 이승만 정권은 어떻게 보면 호전적(?)인 무력복진통일을 국시로 내걸었다. 그 이외의 모든 통일 논의는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기에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며 대통령 후보에까지 올랐던 진보당 당수 조봉암은 북한과의 내통 혐의를 뒤집어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승리와 독재체제 멸망의 필연성을 입증한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권은 무력복진통일론의 포기를 선언하고 평화통일론을 천명했다. 자유당 정권의 논리대로 한다면 민주당 정권은 틀림없이 북한의 사주를 받았거나 은밀히 내통한 혐의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믿는 국민이 있었을까?

민주주의의 승리란 바로 국민여론의 승리와 직결된다. 당연히 이 민족 최대의 질곡인 통일에 대한 갖가지 국민여론이 분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중립화통일', '남북교류', '남북대화' 등등 갖가지 통일에 관련된 방안이 정당과 학생들에 의해 제안되기도 하고 검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5·16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선건설·후통일'론을 내세우며 따라 통일의 '통'자를 꺼내는 것조차 터부시된 상태가 한참이나 계속되었다. 7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민주화 운동과 민족통일에 대한 진지한 물결이 이른바 '재야(在野)'의 목소리로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다. 특히 1972년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에서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이념과 체도를 초월한 민족적인 단합을 통하여 통일을 이룩한다'는 조국통일의 3대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통일 정책 논의는 정부의 독점물이 되고 정작 논의의 주체인 국민은 객체가 되어 버렸다.

두번 다시 우리의 현정사나 정치사를 들춰볼 필요도 없이 통일 논의의 주체는 국민이고 그 핵심은 민주화란 사실을 우리는 확신한다. 도대체 북한이 통일에 대해서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연방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전말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의견이 북한에 동조하고 어떤 의견이 동조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진정한 우리 민주체제의 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통일론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언론과 의사소통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통일논의의 원인인 이 조국의 분단은 누구의 책임인가. 많은 부분 한반도 분단의 원인은 강대국의 세력 다툼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 민족 내부의 통합능력 부족이 일차적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귀결되었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 부활해서 교과서 왜곡이다 불침함모론이라 하며 한반도를 다시 넘겨다보는 이 때, 어떠한 정권이나 어떠한 통일 논의도 외세에 의존하는 것은 또다시 이 민족을 분열로 몰고 갈 것임을 해방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한 우리 정치에의 개입을 예로 들지 않아도 재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진정한 통일로 가는 길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튼튼한 밑거름으로 한, 국민 속에서 우리나라 통일 논의의 활성화가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세 분의 사건이 통일논의에 대한 억압과 제한이 아니라 금기와 독점 실태가 한계를 벗겨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활동 경과 보고

1. 창립총회 및 사무실 개설

●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은 1983년 9월 30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카톨릭상지회관에서 민주주의, 민중의 생존권보장,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독재권력과 투쟁해 온 민주청년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민족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상황은 뿔뿔이 흩어진 민주청년들이 다시 한데 모여 민주운동의 흐름 속에서 양심적인 지식인, 종교인, 정치인, 노동자, 농민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새로운 사회건설에 온몸으로 매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요지의 발기문 채택을 시작으로 이 날의 총회에서는 '고통과 희망을 한 몸에 안고 억압받는 제3세계 민중의 일원으로서, 민족사의 전진에 앞장서야 할 청년으로서' '— 민족통일을 위한 민주정치 확립, — 민주자립경제의 확립, — 자생적이고 창조적인 문화 교육체계의 형성, — 냉전체제 해소와 핵전쟁 방지'를 선언한 「창립 선언문」을 채택하고 목적과 조직, 회원의 자격 등을 규정한 전문 21조의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규약」을 확정하였다. 또 이 날 총회에서는 의장 김근태, 부의장 장영달을 비롯 6명의 집행부를 선출하고 따로 다수의지도위원의 위촉을 집행부에 위임키로 하였다. 이 날 총회는 당초 하오 7시 30분경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당국의 회의장 봉쇄로 말미암아 가까스로 9시 경에야 시작되었으며 150여명의 민주청년들이 회의장 주변에 당도하였으나 상당수가 성북서로 연행되고 59명만이 참석할 수 있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수십명의 민주청년들이 자택에 연금되거나 시내 각 경찰서에 사전 연행 구금되어 총회 참석을 저지당하였고 총회 후 19명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으며 이 중 의장 등 집행부 6명이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파고다빌딩 504호실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1983년 10월 29일 오후 2시 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당국은 11월 7일에서 11월 11일에 걸쳐서 현판을 떼어 내고 입구를 봉쇄하는 등 계속적인 탄압을 시도하였으나 집행부는 이에 집요하게 맞섬으로써 사무실을 고수하였다.

2. 「민주화여! 민주화여! 민주화여!」 발표

●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은 83년 11월 5일 외부인사 초청 다과회를 갖고, '레이건의 방한을 반대하는 등 민주화를 향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제언과 민주청년의 자세'를 밝히는 「민주화여! 민주화여! 민주화여!」를 발표하려 하였으나 기관의 저지로 인해 인근 음식점 '대우정'으로 장소를 옮겨 위성명을 발표하였다. 청년연합은 이 성명을 통해 '우리에게는 자신이 있습니다. 민주화는 세계사의 대세에 합치되며 현상적으로는 끊임없이 패배하지만 밑에 앙금처럼 가라앉아 쌓여가는 민주 민중역량 발전의 확인을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도덕적인 정당성으로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민주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하고 '1. 미소는 신냉전체제를 구조화시키면서 인류의 목숨을 담보로 전율할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2. 미소의 신냉전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켜 민족의 전멸을 가져 올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 현군사독재정권은 과연 민주화, 평화적 정권교체를 할 의사가 있는가? 4. 한국의 국민경제는 대외종속적 특권적 불평등 구조를 갖고 있다. 5. 한국의 문화는 독재권력에 의해 문화제국주의의 굴복과 노예화의 방향으로 조장되고 있다. 6. 한국 민중생활의 현실은 가난과 소외 그리고 고통 그 자체이다. 7.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은 우리의 민주화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독재권력의 지원을 위한 것인가? 8. 민주화운동의 실천방안과 우리의 제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화를 위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 성명서에 청년연합은 '우리 청년은 정말로 겸허하게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과거 학생운동 시절 가졌던 지도적 위치에의 연연함을 단호히 끊고서 청년운동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민주청년의 자성을 촉구하였

고 '목소리만을 크게 외치는 방향은 명당가운동으로 전락케 되며 대중성 획득을 위해서 권력이 금 그러 높은 곳에 머물게 되면 그것은 대중추종이 되어 운동성을 잃고 배배적으로 되며 튼튼한 역량 신실만의 주장은 일종의 세세적 엘리트주의로 빠져 자멸케 된다'고 청년운동의 방향을 천명하였다.

3. 폭력 추방을 위한 활동

● 1983년 11월 10일부터 레이건 방한에 즈음하여 불법연행 및 연금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11월 16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민주화를 외치던 황정하 학형이 목숨을 잃었고 11월 28일에는 김근태 의장이 안기부 국장과 면담 도중 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폭력사태에 대하여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은 EYC, KSCF와 공동대처기로 하고 「이땅에서 폭력은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외신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성명에서 청년연합은 황정하 학형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첫째로 학원탄압을 위해 투입된 현장사찰요원에' '둘째로 무자비하고 악랄한 사찰귀신들을 학원에 투입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원시위를 저지토록 명령한 관계 전력당국에' '세째로 학원 사찰요원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학생들과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통 하고 '이제 우리 모두 이 땅을 죽음의 대열로 이끄는 폭력을 거부하고 다함께 어깨를 나란히 두려움을 떨치고 민주화의 대도를 당당히 내디디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밖에 청년연합은 황정하 학형 추모카드를 제작, 판매하여 가신 이의 민주화예의 열망에 대해 뜻을 기렸다.

4.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의 연대활동

1983년 12월 6일 전북 이리의 태창메리야스 해고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에 돌입함으로써 시작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블랙리스트 철폐운동」은 급기야 인천 지역 해고노동자의 구속 사태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은 12월 6일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 총무를 이리 노동부 지방 사무소에 파견하였으며, 12월 15일 J.O.C. 각 교구연합회 회장단 단식농성, 12월 16일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단식농성, 12월 21일 J.O.C. 주최 노동자를 위한 예배, 철야농성 등에 동참하였다. 이와 동시에 청년연합은 12월 20일 16개 기독교 및 청년단체 연석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기도회 및 공청회,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하였으며 12월 26일에는 13개단체 연합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노동운동자 블랙리스트 문제 대책위원회(위원장 문익환)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위 성명을 통해 청년연합은 '민주노동조합은 권력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고 말았고 드디어는 블랙리스트에 의해 생존의 근거마저 거부되고 말았다. 블랙리스트를 통하여 이들의 취업을 막는 것은 구조적인 살인행위이다. 노동자들로부터 그날 그날 밤 한그릇 연탄 한장을 마련하여 살아나가기 위한 생업을 빼앗을 권리를 가진 자는 누구인가?' 라고 현 정권의 탄압을 폭로하면서 '1.부당하게 구속된 6명의 노동자는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2.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은 전원 복직되고 블랙리스트는 폐기되어야 한다. 3.노동자의 유일한 배움터인 야학의 탄압은 중지되어야 한다. 4.권력은 노동자에게 가한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요구를 밝혔다.

5. 기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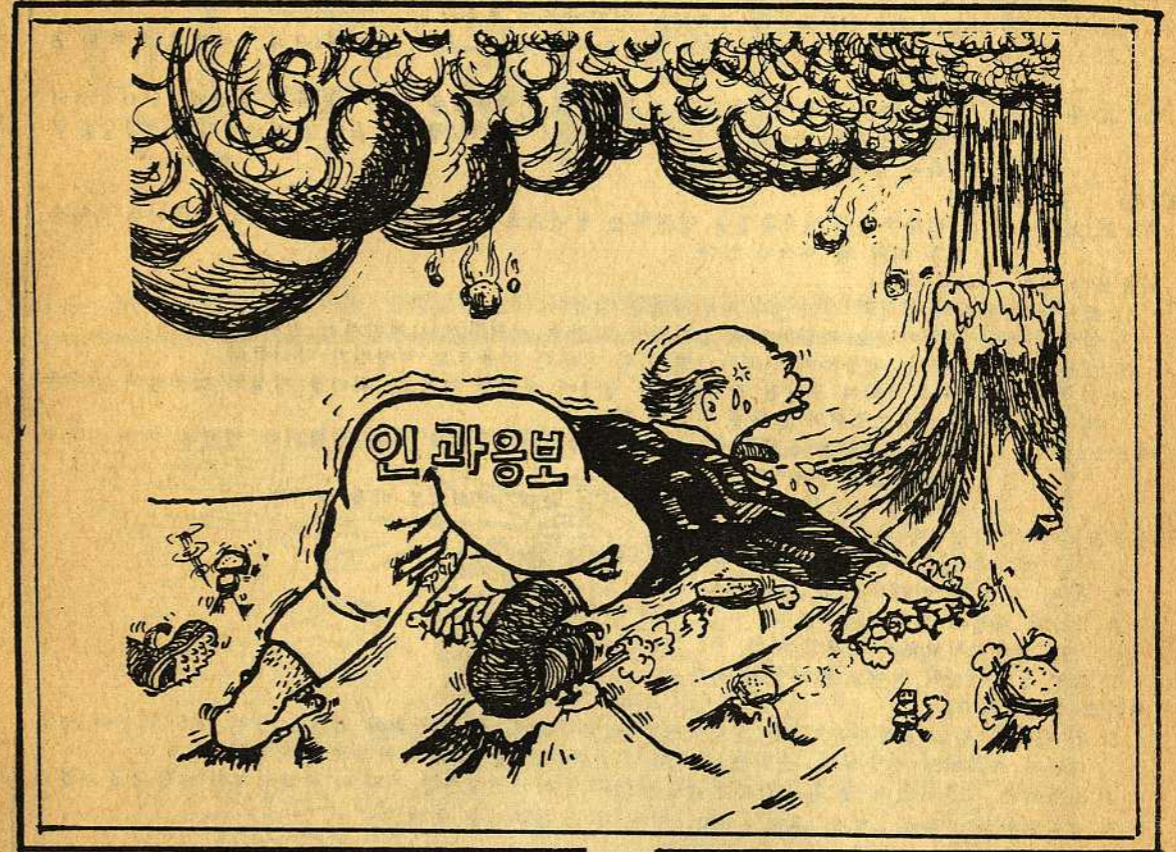
- 11월 13일 고 전태일 추도식 참석.
- 12월 2일 문익환 목사 출판기념회 주최
- 12월 28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망년회 개최. 회원 250여명 참석.

투고안내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회보 「민주화의 길」은 민주화운동에 동참하는 모든 이의 것입니다. 시·수필·평론·노래 등 형식에 관계없이 민주화

의 대의와 부합하는 글이라면 어떤 것이건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청련 홍보부(720-945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상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제정

작년 12월 28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망년회에서는 83년의 민주화운동 모범 사례시상이라는 특별 순서가 있었다.

이 날 시상을 받은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명서부문에 '누가 황정하학형을 죽였는가'가 한 개인의 고민의 극복을 통한 집단적 대응의 타당성을 깊은 심정적 호소로 쉬우면서도 알차게 전달했다는 면에서 '1000만 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는 절실하게 피부에 와닿은 표현으로 노동자들의 인식수준과 전달역량을 알렸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된 제한된 상황에서 '출타기'로 그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달방법을 개척한 사례가 그 창조성을 인정받아 시상받았다.

한편 83년 민중가요대상은 지금은 원혼이 된 광주 어느 부부를 애도한 '님을 위한 행진곡'이, 특별편집상에는 '해고근로자를 복직시켜라'가 현장감넘치는 보도사건을 실어 새로운 차원의 대중매체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시상받았다.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단체는 민주화운동 전국 청년연합이라고 부른다.
- 제2조(소재) 민주화운동 전국 청년연합의 중앙본부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민주화운동(전국) 청년연합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범민족적 운동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연대와 상호부조를 통하여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청년세력의 구심점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과 회의

제4조(회원자격)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청년으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 될 자격이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각급회의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임원이 아닌 회원이라도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안하는 권리를 갖는다.
- (3) 모든 회원의 권리는 평등하며 연령, 성별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 (4) 회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구성된 각급회의의 결정에 성실히 따르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며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8조(총회) (1) 정기총회는 6개월에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집행위의 결의를 거쳐 집행위 의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대간부회의로 이를 대신한다.

제9조(총회의 의결사항)

- (1) 각급 회의의 임원선출,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 및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 (3)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집행위원회에서 회부한 사항
- (5) 회원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된 사항

제10조(집행위원회)

- (1) 본 단체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집행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위원회의 위원은 5인 내지 15인의 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총회는 필요한 위원의 선임을 집행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집행위는 지부의인가 및 회무전반에 관한 사항과 총회의 위임사항, 기타 이 규약이 정한 사항 등을 다룬다.
- (3) 집행위원회는 총무, 재정, 홍보, 사회, 인권 등 5개부서를 둔다.

제13조(상임위원회)

- (1) 상임위원회는 사회발전의 연구, 조사 및 정책개발의 기능을 가지며 집행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 (2)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3) 특별위원회의 임원, 임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제15조(비상대책회의와 확대간부회의)

- (1) 집행위의 성립이 불가능하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본 단체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집행위 의장, 상임위 의장등이 5~10인의 범위 내에서 집행위의 기능을 회복시킬 때까지 집행위의 권한을 승계하는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 (2) 집행위 의장, 상임위 의장, 집행위원 또는 각급 임원은 본 단체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 될 때에는 각급 임원 및 일반회원으로 확대간부회의를 구성하여 회무 전반을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제 조(회비)

- (2) 회원은 매월 자기 수입의 20분의 1을 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규약의 개정과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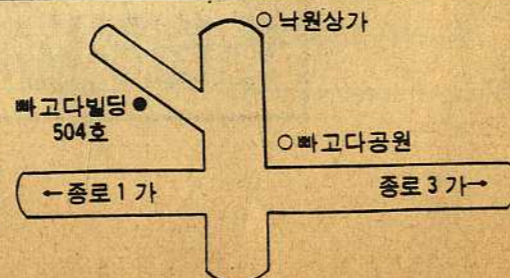
제20조(개정) 본 규약의 개정은 집행위,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행한다.

■ 집행위원회

의 장 김근태 부의 장 장영달 총 무 박우섭
홍보부장 박계동 사회부장 연성수 재정부장 홍성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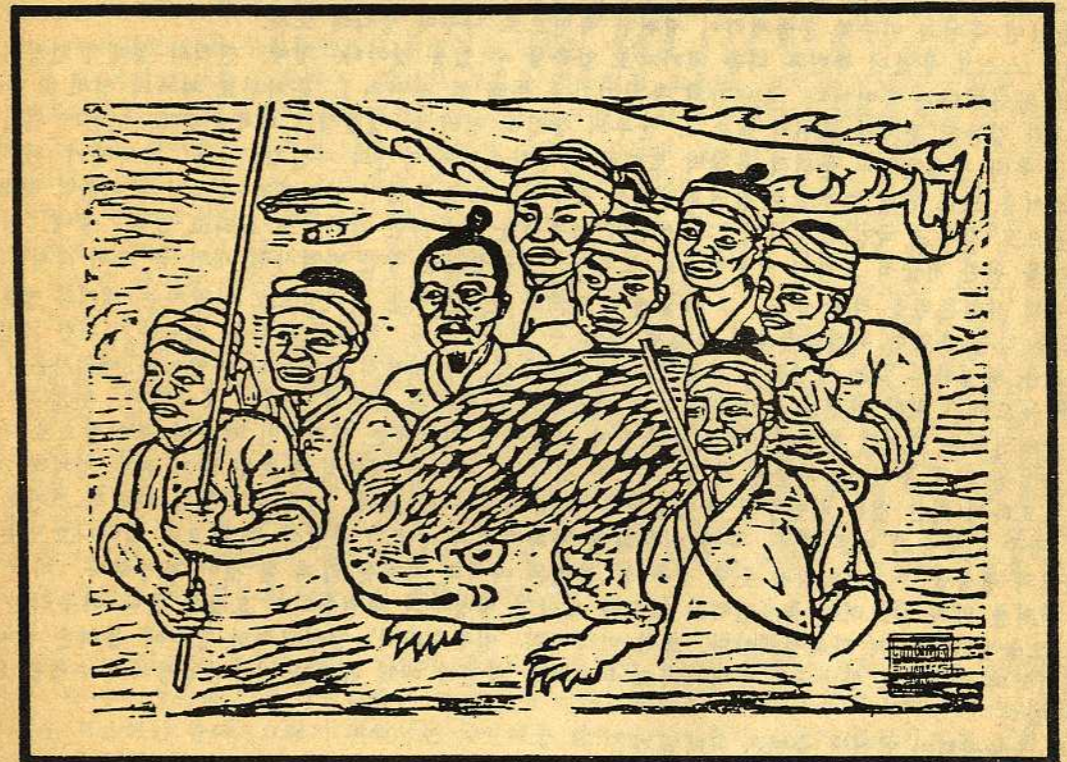
■ 지도위원

강우일, 계훈제, 고영근, 고 은, 김병걸, 김승훈, 김종철,
김태홍, 김택암, 문익환, 박종태, 백기완, 성내운, 송기원,
송기인, 신경림, 양 홍, 예춘호, 호인수, 오태순, 윤반웅,
이경일, 이부영, 이우정, 임채정, 함세웅, 황상근



민주화의 길

발행인 · 김근태 / 편집인 · 박계동 / 발행일자 1984. 4. 25 발행처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720-9452)



1. 소극성을 극복하고 항상 적극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 언제나 운동의 중심에 서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3. 자기가 하고 있는 일만 고집하여 다른 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단이기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4. 동지들에 대한 진실된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제2차 총회 메시지에서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한 개의 칼과 두 개의 방패

—기만적 화해정책에 대한 주체적 인식과 실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주체적·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아무리 작아 보이는 계기일지라도 이를 실천적으로 인식을 하여 운동발전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우리는 창간사에서 천명한 바 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인식과 실천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현 정권주도의 기만적 인 화해정책을 민주화운동의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우선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우리는 정권 스스로 풀었던 측면과 민주화 운동세력이 쟁취한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현정권이 스스로 풀었던 측면은 다음 네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권력의 상대적 안정기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측면이다. 4년간의 통치기간을 통해 현 정권은 1. 통치관료 체제의 정비 2. 독점적 재벌과의 갈등적 관계의 표면적 해소 3. 군부의 잠정적 정비 4. 경찰력의 대폭증강 5. 언론의 완전한 장악 등을 통해 정권안정의 물리적 물질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약간의 자신감(?)을 과시하기 위하여 화해 제스처를 쓰는 한편 그것으로 집권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출됐던 반인간적 폭력성과 위헌적 작태를 가짜 웃음으로 감추고 국민의 지지기반과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까지도 노리고 있다. 둘째, 장기 집권 야망을 위한 전술적 포석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장기집권을 향한 반역사적 개헌 등 소위 정치적 스케줄을 위해 사회혼란을 적극 유도, 그 와중에서 민주화 운동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계기와 명분을 건져내고자 하는 음험한 위장전술로서 도입된 것일 수 있다. 셋째, 경제적 파탄을 모면하기 위한 개방정책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필연적 구조로서의 대외의존성, 즉 경제적 중속성의 측면이다. 해외자본의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체제의 장기적 안정이 요구된다. 탄압적이고 경직된 독재권력은 단기적 정권안정에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체제의 불안정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외국 투자자본가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활로를 뚫기 위한 정치적 기만 정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비민주적 독재정권의 자기 귀결이다. 넷째, 미국을 비롯한 대외적 조건의 측면이다. 광주 민중봉기 이후 광주,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성조기 화형식 등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반미적 감정과 행동을 누그러뜨리지 못할 경우 현 정권은 미국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 자명하다. 미국 행정부의 지지를 잃지 않으려는 독재권력의 의도와 레이건 행정부의 패권주의적 요청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만적 화해정책이다. 또한 미국내의 '민주주의적' 양심세력의 항의에 물려온 레이건은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한국내의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정권에 대해 완고한 민중탄압정책의 수정을 요구 했을 수 있다.

민주화 운동세력이 얻어낸 측면은 어떠한가?

첫째, 학생운동세력의 성장과 사회운동으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이다. 현 정권은 이러한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만적 화해정책을 통해 다음의 세가지 전술목표를 성취하고자 하고 있다. 1. 부학조치를 통해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대중들 삶의 현장에 들어가거나 대중들과 만나는 것을 차단시킨다. 2. 학원자율화 조치를 통해 학내운동에서의 강·온 양파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화운동에 투철한 부분을 극렬소수로 매도하고 고립시킨다. 3. 물리적 탄압이 한계점에 이른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완화정책을 씌으로써 민주화운동의 당면목표 설정에 혼선을 야기시킨다.

둘째, 노동자 조직의 재결성 측면이다. '80년 폭압에 의해 흩어졌던 노동자들이 노동자복지협의회, 청계노조 부구 등을 통해 재조직되고 있다. 현 정권은 부당하고 근로자의 취업제한 및 노조결성 장애조성 등 노골적 탄압정책에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탄압정책을 은폐하면서 기만적 화해정책으로 분열을 노리고 있다.

우리는 실천적 자세를 갖고 지난 날의 패배주의적 입장을 극복하는 관점에서 이상과 같은 기만적 정책의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물론 현재의 국면에서는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지식 청년운동의 부분적 성장만이 있어 전면적 민주화의 쟁취를 지금 당장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현 국면의 주도권은 일단 군사 독재권력 쪽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전술을 상호 연관시켜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통치권력의 전술은 물리적 폭압에 의한 운동조직의 파괴라는 강경책과 민주화 세력을 좌경화라고 매도하여 국민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온건책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군사 독재권력의 유화 정책에 대하여 무슨 흥제가 있지 않나 하고 지레 겁을 먹고 목소리를 낮추어 간다면, 저들은 이를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우리 내부에 분열을 꾀하는 호기로 삼고자 할 것이다. 또한 반대로 우리의 민주화 요구가 드높아지면 이를 사회혼란으로 규정짓고 탄압의 명분과 구실로 삼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현 국면에 대해서 혹자는 '80년의 경험을 떠올릴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과 '80년은 분명히 다르다. 80년은 지배층의 동요기였으며 또한 민주화 세력의 승리감이 충천해 있던 시기였다. 이에 반하여 '84년은 지배층이 상대적 안정기 속에서 상당한 정도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화 운동세력은 '80년의 좌절을 치른 뒤 그 동안의 패배주의적 분위기에서 막 벗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오늘의 국면과 더욱 유사한 상황으로써 1971년도 봄부터 1972년 유신체제의 성립까지의 과정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71년은 1, 2차 경제개발이라는 파행적 중속경제가 처음으로 파탄을 보인 가운데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민주적 정치의식과 전태일 분신자살, 광주대단지 폭동 등으로 나타난 민중의식의 성장, 그리고 교련반대에서 보인 병영국가화예의 거부 및 새로운 미·중공관계에 따른 동북아정세의 변화 등이 그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와 비견해 볼 때 20년에 걸친 민족경제의 철저한 붕괴로 인해 외채의 압박과 실업의 증가가 가중되는 가운데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현 정권의 정치적 기반의 취약성, 민주 노동운동 탄압과 농촌 파탄에서 보이는 현 정권의 반 민중성, 강제징집에서 보이는 학원에 대한 군사적 탄압 등은 그 구조에 있어서 70년대초와 유사함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71년의 박정희 정권은 당시의 민주적, 민중적 의식과 투쟁역량을 학원위수령과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짓누르고, 7.4 남북회담이라는 기만적 통일정책으로 온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오도하면서 '72년의 유신체제를 합법화시켜 나갔다. 그 국면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대목은 조직력의 취약과 통일성의 결여로 인하여 유신체제의 성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이다.

이 점을 상기하면서 조건에 대한 실천적 대응으로 우리는 하나의 칼과 두 개의 방패를 준비할 필요성을 느낀다. 하나의 칼이라 함은 국민대중의 편에서 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즉 대중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대중 삶속에서 민중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중에 대한 선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언론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정 부패의 폭로와 국민대중을 무시하는 제분야 정책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현 정권의 폭력성과 매관성 및 부도덕성을 철저히 폭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나의 방패는 각 부문운동의 조직력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쓰라린 시련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는 관념론이나 준비론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투쟁을 통해 고난을 감수 하면서 추진될 때에만 비로소 실질적 성과로 열매 맺을 것이다. 그것은 고립되어 있는 단위조직의 개별적 강화가 아니라 운동의 통일성을 기하는 시각에서 조직력의 발전과 통합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또 다른 방패는 기층 대중과의 구체적인 연대이다. 지식인들이 관념적 대중운동 토론에 머무르는 것을 반대하고 기층 민중과의 정서적 동질성을 형성하여 우리는 지식인의 노동·농민운동 참여가 갖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쟁취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삶의 개선투쟁이 바로 민주화운동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민중 운동의 튼튼한 토대를 시급히 건설해 내야만 한다.

우리는 부분적 고난과 손실을 감수하면서 단위조직력의 강화와 전체적 통일성을 동시에 구축하려는 적극적 자세로 기만적 화해정책을 민주화운동의 전진에 역활용해야 한다. 저앞에 보이는 통일과 민주의 고지는 반드시 우리들의 실천에 의해 장악될 것이다.

권언복합체의 매카시즘

해직언론인

언론매카시즘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광기가 지난 1, 2월 각 신문지면을 요란하게 장식했었다.

1월 26일 이현재 서울대학총장의 인터뷰 기사를 신호로, 각 신문들이 약속이나 한 듯 기획연재를 통해 민주학 생들을 불온사상 집단으로 몰아쳤던 것이다. 중앙일보의 「진통하는 대학가」 한국일보의 「캠퍼스의 봄은...」, 경향신문의 「대학의 진통」, 조선일보의 「대학을 보는 눈」 등이 그 기획기사의 타이틀들이었다. 그리고 그 기사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데모학생, 세적학생들의 의식과 행태가 좌경화되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데모 주동학생도 좌경이요, 복학대책위원회도 좌경이요, 민주화운동청년연합도 좌경의 혐의가 짙다는 논고였다. 심지어는 민중·민주·민족이라는 정치의식자체가 좌경화의 증거라는 논조를 펴는 기막힌 기사도 있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좌경화의 개념과 기준이 무엇이며, 어디서 어디까지가 좌경화된 행위인지,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설명이 없었다. 단지 관계당국이 좌경화라고 하니 좌경화이고, 언론이 좌경화라고 쓰니까 좌경화라는 식이었다.

현재의 제도언론이 허위의식의 확산을 대가로, 오직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부수단화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매체는 형식상으로나마 객관보도를 생명으로 한다. 따라서 좌경화에 대한 타당성 있는 논거의 제시도 없이, 마치 테러를 가하듯 민주청년들을 무작정 좌경으로 몰아친다는 것은 매카시즘의 동원인 것이다. 어떤 논리가 논리로 성립하려면 그 논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검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논리가 무고한 사람들을 음해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그 논리는 논리가 아니라 논리의 탈을 쓴 폭력에 불과하게 된다.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언론은 이미 언론일 수가 없는 것이다.

민주청년·학생들에 대한 언론의 그 같은 증상·비방은 그래서 무엇을 얻었는가. 고작해야 좌경화된 청년들을 가공으로 양산했을 뿐이다. 수많은 민주청년들이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고 언론에 의해 좌경화로 낙인찍혔던 것이다. 언론의 그 같은 모략선전의 속셈은 누가 보아도 뻔하다. 국민과 민주청년, 국민과 민주화운동 사이를 이간질하자는 속셈,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언론과 그 언론의 배후세력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의 민주화청년운동이 몇몇 의식있는 청년들의 개인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늘 우리의 민주화청년운동은 자유를 향한 역사와 민중의 불가항력적인 표현양태의 하나일 따름이다. 즉 민중(국민)의 뜻인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노리는 야비한 이간 목표는 그러한 발상 자체가 착각일 뿐이다. 결국 이 땅의 권언복합체(權言複合體)가 보이는 민주화운동 및 민주청년들에 대한 음해행위는 그들의 범죄성과 불안울 호도하기 위한 히스테리에 불과하다.

곡필은 하늘이 주(誅) 한다고 한다. 또는 곡필은 역사가 심판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같은 관념적 심판인식을 거부한다. 그러한 인식은 시민사회적 발상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곡필·곡학은 그 피해집단 또는 독자층이 현시적으로 심판해야 한다. 언론 범죄에 대한 심판을 막연한 미래에 맡긴다는 것은 현실도피의 둔사에 불과하다. 역사가 바로 오늘의 삶의 축적인 이상, 막연한 미래의 막연한 사람들에게 오늘의 문제를 미룬다는 것은 가장 반역사적인 태도이다.

언론계 내부에는 아직도 많은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의 양심이 자유언론의 실천으로 타오르기를 기대해 본다. 민주청년들을 겨냥했던 분별없는 언론의 증오는 이제 부메랑이 되어 언론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프게 깨달아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언론은 참담하게 되살아나야만 한다.

모든 분야의 민주화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 날

김정환

살다 보면 오는구나 이런 날이 다시
 어둠 뚫고 백일하에 드러난 기나긴 행렬에 섞여
 내 등어리는 쏟아져 내리는 자유에 흠뻑 젖는다
 진압대는 페퍼포그를 마구 쏘아대며
 우리를 포위하고 밀고 밀리고
 그러나 밀려도 밀려도 밀려날 수 없는
 외침이 이리 길구나 짓밟혀 세멘바닥에 코피를 쏟으며
 한없이 쓰러지면서 분단된 나라 그래도 푸른 하늘 치솟아
 그래도 그래도 한결같은 자유의 행렬이 이리 길구나
 찢겨진 맨살이 드러난 어깻죽지를 맞잡고
 우는 것은 몽둥이에 맞아 터진 내 얼굴 아니라
 우는 것은 구둣발에 짓밟혀 찢어진 내 컷창, 내 입술이 아니라
 조국이다 부모형제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 지금은 너무도 멀리 있는
 지금은 숨죽여 흐느끼고 있는
 상처투성이 우리의 나라
 진압대는 페퍼포그를 쏘아대고 마구 포위하고
 닥치는대로 우리의 성난 가슴을 두드려 맨다
 비여 비여 백일하에 쏟아지는 해방이여 우리의 기쁨이여
 쓰러지고 또 일어서리라 짓밟히고 또 부둥켜 안으리라
 비는 역수로 내리고 마구 흩어지는 대열 흔들리지 않게
 하나가 되자 노래 속에서 앞서서 가노니 외침 속에서
 쓰러진 자 일으키며 땅을 치며 흩어졌던 붓물이 다시 즐거움을 이루며
 거세디거센 해일로 덮칠 때
 아아 우리가 바라는 정의만큼은 이렇게 끝도 없이 외치고 싶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만큼은 이렇게
 백일하에 드러나 외치고 싶다
 자유여 정의여 진리여 우리 밀도 없이 끝도 없이
 눈물 흐르는 춤을 추며 전진하리라

4·19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김 승균(지도위원)

4·19혁명이 있는 지 오늘로 스물 네 돌을 맞이한다. 그 당시 22세의 대학 3학년 학생이었던 내가 어느덧 50고개를 바라보게 되니 참으로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나 할까.

급년 4월호의 각 잡지들이 4·19혁명에 대하여 유난히 떠들썩하게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4·19혁명정신이 구현된 이상사회나 된 것처럼 환상을 갖게마저 한다.

그러나 정작 유심히 들여다보면 초점도 없고 정확하지도 않은 속빈 감경 그대롭다. 4·19혁명 당시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명정신을 오히려 모독하고 현실을 호도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출세만능사상을 퍼뜨리는 이런 무의미한 논지를 언론은 왜 놓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4·19혁명과 출세한 4·19당시의 대학생들을 연계시킴으로써, 4·19혁명 당시의 모모 주역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현 정권이야말로 4·19혁명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4·19혁명 당시의 인물들 중에서 4·19혁명정신을 구현하고자 온 몸을 초개로 여기고 또다시 박정희 독재정권과 싸우다 숨겨간 수많은 4·19혁명가들의 모습은 왜 가리워져야만 하는가?

오늘날의 언론이 제도언론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4·19혁명에 대하여 그토록 무대접하던 역대 정권이 오늘에 와서 4·19혁명가들에게 진수성찬 제삿상을 차리는 것일까.

4·19당시의 학생회가 정부에 의해 조작된 어용학생조직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요즘 떠들썩한 소위 4·19당시의 주체들 중에서 거사기획과 수행에 참여했던 십수명의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데모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교문에서 몽둥이로 데모를 저지하던 학생회 간부들이라는 것은 이미 익히 아는 바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회가 4·19혁명을 주도했다고 보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리다. 그 당시 학생데모 관계 사진을 보면, 마치 군대의 소대장처럼 대열 밖에서 몽둥이로 호위하는 일부 학생회 간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정부와

학교의 명령에 따라 학생의 과격한 행동을 교문에서 저지하다가 도도한 혁명의 물결에 밀려 거리로 나와서도 학생데모를 막는 모습인 것이다.

또한 2.28 대구 경북고생 데모에서 시작하여 3.15 마산의거, 4.18 고대생 데모, 4.19데모, 4.25 교수단 데모에 이르는 전과정을 4·19혁명으로 봐야지 4.19 당일 데모에 참여한 것만 가지고 논하는 것도 무리요, 4.19 당시 적극적으로 데모저지에 나섰던 학생회 간부들이 4·19혁명 주역으로 둔갑하고 정작 자유와 민주주의·민족통일을 위하여 피흘려 싸운 사람들을 그 당시 대학생이 아니라고 하여 소외시킨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4·19혁명이 있는 지 그리 시간이 지나지 않은 10월경에, 분단의 아픔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전국민족통일학생연맹' 운동을 한다 하여, 장면 정권으로부터 4·19혁명 유공자로 표창받은 학생회 간부들에게 으스스한 꼴목으로 끌려가서 테러를 당한 것이 어제같이 기억에 새롭다.

장면 정권과 4·19혁명 추진세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필연적인 귀결이었을 것이다. 하나는 혁명세력이요, 하나는 반혁명·반통일세력이었으니까 말이다. 장면 정권은 학생혁명을 가르타고 앉아 혁명을 저지시키기 위해 학생회와 어용학생단체를 만들어 4·19혁명 추진세력과 맞섰다.

우리는 금력과 권력이 없는 적수공권의 학생들이었으므로 그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다. 그로부터 얼마지 않아 5.16군사 쿠데타를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애국했다는 단지 그 죄만으로 철창 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민족통일운동은 4·19혁명정신의 중요한 요체이다. 독재정권이 타도되었다고 하여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것도 잘못이요, 북진통일의 전쟁광이 넘어졌다고 하여 통일이 이룩된 것도 아니다. 장면 정권도 의연히 북진통일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4·19혁명의 주체라면 옹당 민주화를 위해 발언하고 통일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으리라.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서 역사를 연 5천년 역사상 처

제도언론은 4·19혁명과 출세한 4·19당시의 대학생들을 연계시킴으로써, 4·19주역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현정권이야말로 4·19혁명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분명하다.

음으로 이민족인 일본제국주의의 36년간의 강점 밑에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전쟁터에 남자는 지원병으로, 여자는 정신대로 끌려가 수많은 목숨을 잃어야 했고 이 나라는 강제노동의 수라장으로, 강토는 황폐화되었다. 이러한 착취와 굴종으로부터 벗어나자마자, 천만뜻밖에 이 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대국의 이익에 맞게 조국이 분단되는 더욱 암담한 현실 앞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온힘을 다하여 조국의 분단을 끝장내고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풀려나 우리 민족의 손으로 이 상향을 건설하려는 절절한 염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일 뿐 우리는 우리의 형제가, 부모가 서로 죽이고 죽는 시산혈해의 참담한 한국전쟁 속에 휩쓸리고 말았다. 이것은 미·소 양대국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위하여 죽어 가야 할 숫자만큼 우리민족이 대신 죽어 간 것이다. 그렇게도 무참히 조국이 폐허가 되고 이 민족의 몇 분의 일이 죽어 갔어도 조국의 분단은 가시지 않고 오히려 더욱 튼튼한 철책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독재자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간판아래 민의를 조작하여 민족을 기만하고 헌법조차 바꿔 가며 장기집권을 노렸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자는 한강 백사장의 열렬한 민족적 지지를 뒤로 하고 두 차례나 계속 죽어 갔다. 북진통일 전쟁정책을 완고히 외쳐대는 이승만 정권 앞에 조봉암은 평화통일과 남북대화의 슬로건으로 민중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으나, 바로 민중의 지지 때문에 그는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죽어 가야만 했다. 더 이상 장황한 설명은 필요가 없다. 민중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했다. 강대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가난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조국을 가꾸기를 원했다. 부정과 부패를 원치 않고 민족반역자가 벌을 받고 애국자가 추앙받는 사회를 원했다. 억압과 수탈의 독재정치를 반대하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요구했다. 반공의 허울 밑에 도사린 불순한 독력배들을 증오했다. 언론이라는 이름 밑에 민의를 타살하는 관제언론을 부정했다.

이것은 4·19당시 학생들이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응징했는가를 보면 일목요연 잘 드러난다.

관제 어용의 정부기관지 서울신문마저 불지른 학생들의 원한은 무엇을 말했는가. 4·19혁명 뒷처리를 물려받은 장면 정권은 민중의 요구에 어떻게 대답했나.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각종단체를 탄압하기에 급급했

고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을 제정하고 이승만도 미처 못했던 국가보안법을 만들고(반공의 너울을 쓰고 민중을 탄압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쟁의를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속박하고 관제 어용의 대한교련에 맞서 탄생된 교원노조를 탄압하지 않았던가.

장면 정권외에 이 민중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아야 할 필요가 있는 세력이 국내외에 또 있었다. 그들은 5.16이라는 군사정변으로 장면 정권을 축출하고 군사정권을 수립함과 동시에 그 민중을 탄압하였고 사실상 4·19혁명을 뒤엎어 버렸다.

따라서 박정권이 들어서자마자 4·19혁명 이후에 있었던 노동운동, 학원운동, 언론운동, 통일운동, 혁신계 운동 등을 무차별 탄압하였다. 우리가 총칼의 위압에서 처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저항을 시도한 것이 1964년 6.3사태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발굽 아래에서 헤어나지 20년도 채 못 되는 바로 그때에 왜놈은 보무도 당당히 이 나라에 상륙한 것이다. 이 민족의 감정이 나 외세로부터 자유를 피땀하게 외치는 민중에게 세계에서 악독하기로 으뜸가는 일제를 또다시 불러들이는 것으로 대답했다. 그러한 박정권의 속성을 아는 4·19정신의 인사들이라면 반혁명과 반역사에 동참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외치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린다. 언론, 집회, 결사,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요체이다. 감옥에 가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며 초점없이 지껄일 수 있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4·19의 요구와 오늘날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화운동의 각종 단체와 학생들의 외침의 차이점을 찾아보라. 모두가 자기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끝없이 숙고하고 결단하며 정의로운 행동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그것만이 민주주의와 자유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앞서 떠나신 영령 앞에 떳떳한 길이다.

옆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자기의 양심을 쳐다보자. 부모 처자의 얼굴을, 마음을 쳐다보지 말고 스스로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자. 4·19의 구용담으로 출세의 길에 서지 말고 그날 앞서 죽어 간 동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말자.

4월 혁명의 현재적 의미

1. 4·19는 실패한 혁명인가

조직되지 않은 대중의 힘에 의해 한 정권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커다란 사건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해마다 4월이 오면 진달래꽃 빛 붉은 피를 광화문 네거리에 흘리며 죽어 간 영령들을 생각하며 뭉클 솟아오르는 감동을 맛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4·19가 실패한 혁명이라고 말한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상황적 증거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자유당 정권의 붕괴가 곧바로 다음 해에 군사 쿠데타로 연결되어,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암제의 총구 앞에 맨몸으로 항거한 투사들의 투혼을 무색하게 해 버렸던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4·19 주역들의 그 이후 변신과정이야말로 통탄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에서 주역을 맡았던 사람들 중에 유신 치하에서 유정회 국회의원을 하거나 유신헌법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준 사람들도 있으며 심지어는 현재 민정당 국회의원 또는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자들을 보면 과연 4·19는 실패한 혁명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훌륭한 역사는 슬퍼해야 할 그 무엇도, 기뻐해야 할 그 무엇도 아닌 것이다. 역사란 단지 과거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에서 서서 부단히 앞으로 나아갈 뿐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역사란 일직선으로 현재에까지 도달하여 온 것이 아니라 반동과 진보가 서로 얽혀 비비꼬이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4·19 이후 4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4·19를 역사적 실체로 파악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매몰되어 버린 역사를 발굴하는 심정으로 완벽한 사적 논리를 갖춘 4월혁명론을 정립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2. 어떻게 해서 자유당정권의 붕괴가 가능했는가

학생들의 봉기 그 자체가 정권의 붕괴에 결정적인 타

격을 가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생들의 힘으로 정권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이 학생운동에 일종의 환상을 풍겨 해주었던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는 1876년의 개항을 시발점으로 해서 세계 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어 들어갔다. 그 이후의 역사의 흐름은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탈과 그에 대한 저항으로 점철되어 왔다. 침략의 힘과 저항의 힘이 춘보의 양보도 없이 적대적 대결의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 어느 한 쪽 힘의 강화 또는 약화가 역사발전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후진자본주의국가인 제3세계에서의 혁명 과정이란 바로 이 저항의 힘의 강화 또는 착취의 힘의 약화의 단계적 전개과정인 것이다.

20세기 초반에 선진자본주의 열강간에 제국주의적 식민지 재분할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침략의 힘이 약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불과 수십 년에 걸친 기간이었으나 중국과 인도에서는 외국자본에 저항하는 민족자본이 스투를 트고 그 자기재생산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사상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일본 제국주의의 가혹한 침략을 받은 우리나라는 민족 단위의 독자적인 자기재생산구조를 갖는 명실상부한 민족자본가계급이 역사전개에 있어서의 한 세력으로 등장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타율적으로 주어질 해방이란 우리민족이 감내하기에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자유당정권이 원조경제에 기생하는 종속적 자본주의체제를 구축할 역사적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에 민족자본이 존재했었다고 하는 역사적 자부심을 갖고 있지 못하며 오늘날의 현실 또한 그러한 상태이다.

50년대 말 미국이 자기 내적인 요구에 의해 대량적인 원조경제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자유당정권은 곧바로 형해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 위에서 사회 각 계층의 자기 요구가 공공연하게 노출되기 시작했고 저항의 힘은 순식간에 증폭되어 갔던 것이다. 4·19의 성격은 명확한 계

급적 구분이 없는 무차별한 대중이 지배계급과 대립하여 벌인 정치 투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각 사회운동의 물질적 기반은 무엇이었는가

자유당정권의 붕괴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계층이 학생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여타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19 당시 우리나라는 원조경제에 기생하는 3차산업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을지언정 제조업에 종사하는 공장노동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취업 내지 반실업 상태에 있던 도시빈민들이 봉기의 과정에서 민중의 힘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도시로 무작정 상경한 자들이었고 도시의 어느 일명 지역에 판자촌이라고 불리는 슬럼가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노동의 과정에서의 조직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주거 지역 단위의 지역적 연대감이 오히려 결집력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것은 그후 70년대 초에 일어난 광주대단지사건에까지 해당된다.

이것이 4·19를 혁명으로 계속 밀고 나가지 못한 역사적 제약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점차로 해소되어 나간다.

4·19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계층이 학생이라는 것도 또한 사적 제약조건이었다. 대학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상부계층으로 상승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대학생이 관념을 통해 아무리 사회변혁을 꿈꾸어도 그들이 그러한 관념을 키워나가면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없다면 그것은 한낱 도로아미타불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4·19세대들이 인식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처음에 살펴본 4·19 주역들의 배반과정도 슬퍼해야 할 그 무엇이랄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사적 제약조건의 반영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4·19에서 주역을 맡았던 학생계층의 일부가 지배계층으로 편입되어 들어갔지만 또한 많은 부분이 민중운동으로 투신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에 노동현장으로 뛰어든 사람들의 경우 노동운동의 장을 건설하는 데 대체로 실패했다. 오히려 당시 학생운동적 차원에서 펼쳐졌던 농촌계몽활동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농민운동분야로 진출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사회의 객관적 조건이 노동운동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양을 아직 갖추지 못했으며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원조경제에 의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던 농민운동의 건설이 상대적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4·19에서 주역을 맡았던 학생운동 세력의 한계가 있다. 우선 그들은 사회의 객관적 조건이 장차 진행되는 갈 방향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했다. 학

생운동은 60년 경제개발계획 과정을 지치면서 서서히 그러한 인식을 넓혀 가게 된다. 또한 그들은 학생운동을 사회의 운동력으로 전화시키는 역할에 있어서 청년운동에 관한 인식이 부재했다. 지식인에게 있어서 사회운동권의 건설은 현실에 뿌리내린 건강한 삶을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운동의 질적인 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청년운동을 건설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4. 4·19는 혁명이었다

4·19는 혁명인 동시에 우리나라 현대사 전개의 한 흐름을 여는 시발점이다.

4·19가 혁명인 이유는 대중의 힘으로 정권을 붕괴시킴으로써 대중이 스스로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대사 속을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민중은 4·19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침략의 힘과 암제의 힘이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져 약화되기만 한다면 그리고 저항의 힘이 자기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 기반과 조직력을 갖추어 가기 시작한다면 모든 사람의 뇌리에 1960년 4월의 푸른 하늘이 다시금 되살아날 것이다.

암제의 미몽에 해매던 우리나라 민중은 4월혁명을 통해 피의 값을 치르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깨달았으며 민주주의가 쟁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험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변혁은 4월혁명을 기점으로 한다. 4월혁명을 '미완의 혁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굳이 '미완'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4·19는 그 자체로서 혁명이다.

오늘날의 학생운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70년대와 80년대를 통해 학생운동은 그 저항의 힘(투쟁력)을 꾸준히 성장시켜 왔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전진할 것이다.

그러나 4·19의 주역들이 자기운동기반을 찾지 못하고 체제내로 편입되어 변질되어간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70년대와 80년대의 학생운동 세력들은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학생운동은 그 자체의 주어진 테두리를 벗어나 사회운동으로서 청년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은 학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매관자본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노동운동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운동운동 불은시키는 어떠한 선전과 모략도 모두 분쇄해야 하며 지식인으로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쟁취해야만 한다. 고난받는 민중을 향하여 힘찬 한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나라 현대사는 다시 한번 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70년대의 몸쓸 유산

70년대의 먹구름이 여전히 우리 머리 위에서 겹겹이 들고 있다. 철혹같은 구름이 우리의 앞길을 자욱히 덮고 있다. 복지사회니 개방사회니 자율화니 하는 말 따위는 한갓 컛전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고 뜬소문일 뿐, 알맹이 없고 뿌리 없는 교언영색(巧言令色)이다. 80년대가 진정 뜻있는 80년대가 되려면 70년대의 몸쓸 유산을 철저히 깨끗이 쓰러내지 않고는 어렵도 없다.

그러면 70년대는 어떠했는가. 70년대는 권력자들의 괴이하고도 엄청난 힘이 하늘과 땅을 주름잡고 날뛰던 몸서리나는 과거다. 덜어놓고 <하면 된다>라는 목청이 벼락처럼 온 백성들의 가슴팍을 내리쳤다. <하면 된다>라는 권력자의 구령은 앞뒤 좌우 가림없이 불문곡직, 탕크처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몰아대는 힘의 과시였다. 그 통해 진리는 풍비박산되고 양심의 목소리는 쥐구멍 찾기조차 힘들었다.

<비상>이라는 이름 밑에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낚아갔던 때가 70년대다.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눈이 없어 사물의 본질을 식별할 수 없었고, 상황의 진부를 가려낼 수도 없었다. 입이 있어도 입이 없어 할 말을 제대로 입밖에 낼 수가 없었다. 입바른 소리, 바른 말은 죽각 박살나는 일이 예사로왔다. 그 시대는 김지하 시인이 <비어>에서 밝혔 듯이, <들볶이고 씹히고 얻어터지고 물리고 걸어채이고 피보고 지지뺨히고 땅맛>하던 때다.

사람들은 저마다 겁먹은 눈초리로 서로 서로 믿지 못했다. 위수령이다 제엄령이다 긴급조치다 혹은 무슨 특별조치법이다 하고, 아몽든 형형색색의 법령이 짝 깔려 어디 가나 걸리지 않는 데가 없었다. 가는 곳마다 걸상에 걸리고 철조망에 찢기었다. 저미줄처럼 법망이 사방팔방에 펼쳐졌으나, 그러면서도 법은 멀고 주먹과 걸어차기가 활개치지 않았던가. 사람들은 도청당하고 미행당하고 연행되고 구류처분을 받고 실행 언도를 받는 등, 지극히 지극한 정보정치와 물리적 폭력에 숨통이 막혔던 것이다.

그 잔혹한 70년대에 우리는 수많은 지식인들의 도덕적 타락을 목격했다. 가치관이 없는 지식을 밀천으로 잔재주를 부리면서, 고위층의 자문위원회다 또는 무슨 학술회의다 평가교수회의다 하는 곳에 들랑날랑하던 이른바 유신학자들이 그것이었다.

그 사회에서 문학이 또한 잇속의 눈으로 모든 사물과 현상과 가치를 가늠해 볼 때만이 큰 대접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문학에서 정치를 배제하고 순수성이다 자율성이다 하고 입을 줄랑거리던 사람들이 실은 집권당의 갖가지 문화행사와 홍보시책에 큰 몫을 떠맡고 동분서주했다. 관주도형의 민족문학 중흥 사업이 개시되자, 상당한 문인들이 마치 이 나라에 문학의 르네상스라도 일게 된 듯 들떠 있었다. 75년에 문예진흥원은 작가·시인들을 농촌에 파견해서 새마을운동의 농민문학을 쓰도록 권장하며 상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는 문학이란 과연 그런 걸까, 그렇게 해서 생산되는 걸까 하고 실소하며 쓴맛을 다시지 않을 수 없었다.

관주도형의 문화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떤 문인들은 권력의 요구에 그야말로 큰 떡을 보고 눈이 시뻘쩍게 달아오르는 도덕적 과열을 드러내보이는 것이었다. 또 어떤 문인들은 권력자가 사살되자 그를 가리켜 <천하에 들도 없는 위인>이라거나, <영명하시고 구세주나 다름없는 분>이라거나 또는 <성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분> <민족 중흥의 경륜으로 일렁이던 곤센 그 이름> 등,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사물 다 써가며 정권에 아첨을 떨고 알랑방귀를 뀌기도 했다.

그 잔혹한 70년대에 우리는 수많은 지식인들의 도덕적 타락을 목격했다. 가치관이 없는 지식을 밀천으로 잔재주를 부리면서 고위층의 자문위원회다 또는 무슨 학술회의다 하는 곳에...

그런가 하면 일제때부터 순수시의 아성이라 일컬어졌던 작고한 어느 시인은 70년대의 길목에서 집권당의 정치현실을 다음과 같이 옥타브 높게 읊조리기도 했다.

땀과 기적과 신호음의 / 60년대를 거쳐 /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 터전이 되었다. / 땀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 우리는 주춧돌을 놓고 / 다리를 놓고 / 길을 트고 / 내일의 / 하늘을 날 수 있는 / 날개를 마련하였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목소리인가. 70년대야말로 이 나라의 역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대의 예측적인 근대화 경제정책으로, 농·어촌이 총파탄되고 노동자들이 또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소모품이 아니다>라고 몸부림치며 절규했던 민족적 비극의 현상이 아니었던가.

고고한 순수정신을 저버리고 시가 이처럼 구호적이며 행진곡이고 선전 배자로 타락한 문학풍토는, 당사자에게 국한되지만도 않는 우리 모두의 불행이었다고 해야 하겠다. 시사적인 산문만큼도 가치가 없는 시가 시로 행세했으니 어찌 한심하고 통탄스럽지 않겠느냐.

70년대의 문학풍토에서 또 한가지 한심했던 것은, 종속경제로 급조된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상업행위에 정신 없이 늘어난 문학의 양산화(量産化)였다. 그 현상은 우리의 미숙한 정신세계에 민족문화의 참다운 창달과는 전혀 동떨어진 향락적 소비성을 조장한 것으로, 그 저질 문화의 해독이 여간 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적 작업의 고약한 배반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수준 이하의 사회적 혼탁과 음흉한 연극을 빚어낸 인간부재의 정치무대와 인권·민권의 존엄스러움을 미물화해서 마구 짓밟은 권부(權府) 및 공권력의 횡포를 눈앞에 보고도, 길게 아랑곳하지 않아도 자책감이 없을 만큼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흐려놓고 무디게 한 까닭이다.

이성적인 행동이 제 기능을 펼 수 없도록 온갖 유보사항이 철조망인 양 우리의 들레에 설치되었던 상황 속에서, 그러나 날카로운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 저항의 몸짓들이 시대의 증언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총과 칼로 사납게 옥박지르고 / 논과 밭에 자라나는 우리들의 뜻을 / 군화발로 지근지근 짓밟아대고 / 밟아대며 조상들을 비웃어 대는 / 지금은 겨울인가 / 한밤중인가 / 논과 밭이 얼어붙는 겨울 한때를 / 여보게 우리들은 우리들은 / 무엇으로 달래야 하는가

정치는 순리와 상식을 벗어나 독단으로 흘렀고, 독단은 마침내 폭력을 낳았다. 시인 양성우는 그것을 『겨울 공화국』이라고 불렀다. 그 공화국에서 얼마나 많은 꽃다운 희망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눈물을 망울지며 쓰러졌던가. 폭력이 제 세상인 양 칼춤을 추던 시대,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하게 짓밟히던 시대, 사람들이 가위에 눌린 듯 공포에 시달렸던 70년대. 아, 그것은 추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잔인한 계절이었다.

최근의 정치·경제·사회 상황

■ 경제

● 물가 최근 3개월간의 물가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가 1.9%, 도매물가지수가 0.8%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말의 목표치가 소비자물가 2.6%, 도매물가지수가 1.8%로 예정되어 있으니 연말목표치를 3개월간에 육박한 셈이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목표치를 넘어서면 중간에 새로운 목표치를 설정하곤 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현실하에서는 물가인상목표치만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해서 문제가 호도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왜냐하면 물가인상이 지속되는 한 국민소득에 대한 국내 저축율을 24%선에서 30%선으로 끌어 올려야 하는 지상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외채도입에 의한 해외 저축요인이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저축에 의한 투자재원 확보가 긴요한 과제이다.) 더군다나 정부 및 기업측의 임금동결 또는 호봉조정 정도의 인상조치에 대한 변명은 바로 연간 물가 인상을 2~3%내외의 목표치를 거론하는 것이 예사였다.

● 국제수지와 한미경제관계 3월 20일 현재 무역적자가 11억 6,000만 달러를 기록, 연말 목표치 10억달러를 이미 초과 달성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84년도의 연간 수출예상액을 270억달러, 수입예상액을 280억달러로 잡아 목표치 자체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말이 많았었다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마당에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인 컬러 TV에 대해 덤핑판정을 내렸다. 철강 타이어 등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여러가지 상품에 대한 덤핑 관세부과, 수출자율규제 요구, 특혜 관세(GSP) 혜택 중지 등과 같은 보호무역주의적 조치 중의 하나라 하겠다. 미국측의 덤핑판정과 관련, 금진호 상공부장관 및 전경련 회장단을 위시한 대미상품구매사절단의 미국에서의 구매활동에 관해서도 언급할 점이 있다. 설령 구매물자의 성격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을지라도 그러한 행동이 결코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 못하였다는 사실 또한 부인키 어렵다. 연간 600억달러의 무역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국제수지 상황을 감안해 주길 애당초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미국은 그들의 대소방위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무상원조가 아니라 판매하는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월말 리건 미재무장관의 방한시 미국측이 제기한 자본시장의 개방 요구라든지 외국인 투자 여건 조성요구는 그들이 자신의 실리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되풀이 강조해 주고 있다. 다시 리건 재무장관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최근 한국의 대미무역사절단의 미국에서의 단순한 구매활동을 가리켜 「한국의 통상사절단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다」고 말했다. 무엇을 가리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다녀간 수 일 후의 국인 100%투자업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뒤를 잇고 있다. 수입자유화 폭의 확대와 발맞추어 또한 가지 이권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와 관련된 최근의 중요한 동향의 하나로서 미국의 이자율 상승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금년 2월 중순경 11%까지 하락하던 미국의 주요은행 우대금리가 4월 초에는 12%선까지 상승하였다. 83년말 외채가 401억달러나 되고 그 가운데 상당부분은 금리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 외채구성을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 더구나 80년대 들어와 악화일로에 있는 불안정한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을 생각한다면 더욱 더 큰 문제라 하겠다.(83년 11월말 현재 11개월간 개발도상국이 국제금융 시장에서 차입한 외채는 234억달러에 그쳐 82년도의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이다. 더구나 이 가운데 약 150억달러는 국제금융이나 IMF 협조융자이고 70억달러는 태국·한국 등의 비 국제금융국가들이 신규차입한 외채였다.)

● 국민총생산(GNP)과 고용 및 범죄의 증가 83년도의 GNP성장률이 9.3%라는 놀라운 숫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83년도의 GNP수준은 1979년도에 비할 때(80년도의 감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해 보면) 15%정도의 증가를 보이는 수준이다. 매년 늘어나는 경제활동인구가 1.5%정도라는 점을 생각해 보라. 실제로 1983년도의 경제활동인구는 1979년을 100으로 칠 때 106.5정도로 늘고 있다. 14세 이상인구는 1979년 100 대비 110 정도임! 그런데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을 따져볼 때 79년도를 100으로 친다면 121 정도나 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장비율의 개선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1981년 이래 기계시설투자 증가율이 각각 0.3%, 1.2% 및 8.6%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노동생산성 증가의 주요원인은 노동강도강화 및 노동시간연장을 통한 고용감소에서 찾아져야 할 것 같다. 실제로 80년 이래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83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제조업의 노동강도강화 및 노동시간연장의 영향은 바로 서비스업으로 파급된 것이다.)

결국 단순·미숙련노동자가 실직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79년 이후 이농민 가운데 상당수도 기술습득이 어려운 점, 도시 생활에의 적응이 어려운 점 등을 생각할 때 취업키 어려우리란 점은 확실하다. 그런데다가 서민용 물가는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고 조세부담률은 증가해 가고만 있다. 이와 같은 여건과 80년도 이후 훨씬 가혹해진 형벌제도하에서도 강도 및 절도범이 늘어나고 있는 저변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개처형 또는 극형만으로 해결해 버리자는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 논의인가.

● 재벌 80년대는 우리나라 재벌들에 있어서 새로운 축적의 시대가 되고 있다. 헤아릴 수도 없는 고층빌딩을 신축증인가 하면 은행을 취득하고 수많은 계열기업을 흡수 합병하고 있다. 있는 대로 은행용자를 끌어 대는가 하면 작년보다 높은 순익을 올리고서도 배당률을 낮춰 사내 유보를 늘리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다. 70년대와는 현격하게 달리 80년대의 재벌의 총수들은 홍보를 중요시 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문어발식 기업확장'이라느니 '특혜기업'이라느니 하는 소리가 높아 갈수록 재벌들의 광고·홍보의 노력 또한 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대학생들과의 TV토론 등을 통해 그룹내에 있지도 않은 "노동조합도 있고 노사협의회도 두고……" 운운하고 있다.

○ 농촌: 60, 70년대 경제개발과정에서 몰락한 농민은 도시로 몰려가 노동자나 산동네 혹은 하천변 판자촌의 빈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농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줄 노력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단지 기업농 및 자립농의 형태로 농촌을 유지·보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장기계획 가운데 나타날 뿐이고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와 같은 농업생산 기반의 구조개편은 계획되고 있지 않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농업문제에 관한 주요 관심사는 농산물가격이 폭등되는 사태에 대비한다는 정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과일값 폭락이나 돼지고기 파동이 닥치더라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다. 전체 농가의 46%나 되는 소작농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나 계속 줄을 이을 이농민에 대한 구체적인 고용대책 등도 마련되고 있지 않다. 최근 민정당과 정부일각에서 환기시키고 있는 농업문제에 관심이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환심사가 위한 일시적인 인기전술에 불과한 느낌이다. 농협의 민주화, 농산물 수입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토지생산기반의 개편작업을 통한 농민의 경제적 자생력 및 저항능력 회복, 농산물 가격에 대한 재검토 등과 같은 농업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치유책을 쓰지 않는 한 농업문제가 해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 정치

● 정권유지작전 80년 이래 한국상황의 특징을 들라고 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사건이 빈발한다는 점, 예상밖의 엄청난 조치가 성행한다는 점, 등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 정권이 무엇을 할 것인지 촛보도 내다볼 수 없다는 사실보다 한국상황을 특징짓는 면은 없을 것이다. 시중에 나도는 무수한 유언비어들은 바로 현 정권이 무엇을 할 것인지 점쳐보거나 이미 행해진 조치를 나름대로 설명해 보는 상황해석들이다.

'소폭해금설', '대폭해금설', '조기총선설', '12월총선설', '내년초총선설', '통일헌법개헌설', '직선제개헌설', '신당설', '00통폐합설', '00회사부도설', '00경제조치설', '전대통령방일설', '3자회담설', '00씨귀국설', '00기우위설', '00기탈락설' 일일이 거론하기에도 어지러운 이 '설'들의 진원지는 어디인가?

기본적으로 제5공화국이란 군사독재정권이다. 군사독재정권에 있어 '정치'란 '작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다름아닌 국민을 상대로 한 정권유지작전인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합의된 정치일정이란 존재할 수 없다. 정치일정이란 정권 즉 작전수행자만이 알아야 할 기밀사항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치일정이란 작전계획인

것이다. 일반국민은 이를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어야 이 작전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결국 현 정권의 행위는 국민의 의표를 저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의외의 '조치'로 나타날 뿐이다. 집권초기의 슬한 '조치'들은 거론치 않더라도 최근의 복교조치, 석방조치, 해금조치도 다 그러한 예에 속한다. 복교·석방 조치만 해도, 문교장관이 절대 복교할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 후 2차해금 압박이란 소문이 한창 떠돌 즈음 난 데없이 행해진 것이다.

또 한가지 예로 중요 국가원수가 방한하더라도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 않는 것이 어느새 상례가 되어 버렸다. 레이건 방한 때도 그러했지만 이것은 5월초 교황방한에도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논외로 쳐주기로 하자.

더욱 기막힌 경우가 현재 당연시되고 있다. 금년은 선거의 해라 한다. 신문에는 선거운동과열, 지역구경합, 출마자명단, 선거에 따른 신당설, 해금자 영입, 정당 내의 잠음 등 선거관계기사가 빠지는 날이 없다. 그러나 분명 선거철이긴 한데 정작 국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총선일자를 모르고 있다. 현 정권은 총선일자조차 발표하지 않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3차해금의 시기나 폭에 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대리전의 배후** 최근 상황의 두드러진 점은 모든 사회적 모순의 정치적 탈색화이다. 즉, 재신임의 의미를 갖는 선거를 앞두고 현 정권은 집권 이후 더욱 침체화해 가는 모순에서 정치적 책임을 면해 보려 하는 것이다. 모든 모순으로부터 현 정권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다.

첫째로 정치해금자 문제는 기존정당이 처리하도록 떠맡기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 집권세력의 기반조성을 위해 묶어 놓았던 정치피규제자들을 그들과 부분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기존 제도정당에 흡수토록 함으로써 기존정당의 내부를 더욱 분열시키고 니전추구하도록 하여 자신에 대한 경쟁존재로서의 정치상대를 말살시킨다.

두번째로 학원문제는 자율화란 명목으로 대학교수에 떠맡기고 있다. 학원사태를 5·17 쿠데타로 집권한 현 정권의 반민주·반민중적폭력성에 그 근본원인이 있음에도 이를 학내자율화의 차원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또한 동시에 언론을 학생들에 대한 흑색선전에 동원하고 있다. 종래 현 정권의 경찰, 검찰이 담당했던 학생처리임무를 대학과 언론이 떠맡은 것이다.

세번째로 민생의 문제는 재벌의 폐해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민중의 생활고의 원인은 이 나라의 중속적 파행적 경제구조에 있으며 재벌이 그 주된 담당자이긴 하지만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엄청난 특혜금융대출, 부동산과점 등은 정권과의 결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재벌의 비대화현상은 한국경제의 기본적 성격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그것이 특히 현 정권이 집권한 80년 이후에는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은 일일이 통계숫자를 제시하지 않아도 알만한 일이다.

네번째로 현 정권은 언론을 동원 범죄의 흉악화를 대대적으로 부각시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동시에 그 원인을 청소년문제나 사회의 소비·타락풍조에 전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의 문화정책이 소위 '3S정책(스포츠 섹스 스크린)'이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또한 폭력없는 사회를 외쳐대도 광주사태라는 엄청난 정권적 폭력보다 더 가증스러운 폭력은 없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현, 정권은 기존정당, 교수, 언론, 재벌기업, 사회범죄현상 등을 내세워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리전'을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상대는 기존정당도, 교수도, 재벌기업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문제는 안고있으나 우리 민주화운동이 맞서야 할 것은 그 배후에 있는 현 군사독재정권인 것이다.

■ 사 회

● **언론**: 80년대 이후의 언론정책을 살핀다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거론해야 할 것 같다. 첫째는 언론의 행정부에 대한 시너화요 둘째는 급격한 언론매체의 증가 및 개발이다. 우선, 최근의 학원 관련보도에서 보듯이 신문 및 방송의 편집 및 편성이 천편일률적이고 무비판적인 정부방침의 전달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질적 하락과 아울러 급격한 양적 팽창도 있었다. 최근에도 보이듯이 학원문제의 원인이 마치 학생 및 대외홍보에 나 있는 듯이 대학내에 홍보국이 생기는가 하면 전경련 안에 홍보실의 위치를 대폭 격상시켰다. 또한 신문 등 언론기관의 '공익성'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문공부내에 홍보조정실을 두어 언론기관에 소위 '보도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가히 80년대는 '언론의 시대', '홍보의 시대'라고나 할까.

홍보에는 탤런트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장막뒤의 조정관격인 탤런트가 있을 것이고 은막에 화려하게 등장할 탤런트가 또 있게 마련이다. 대표적인 스타로 나선 사람 가운데 하나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며 최근에는 김우중 대우그룹회장도 등장하고 있다. 이 시대의 두 주역인 재벌과 대학생과의 만남이 TV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뉴스시간 전에 할애된 대통령시간이나 신문 1면의 대통령난의 확대개편도 80년대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80년대는 홍보의 시대이자 교육의 시대이다. 죽자 사자 해대는 것이 공부고 면학분위기의 정착이며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구현이다. 그런데 그 교육의 중요부분이 주입식이라는 점에서 '홍보'와 '교육'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혼동케 한다. 이러한 교육 가운데 두드러진 현상으로 반상회보의 등장과 경제교육의 생활화가 있다.

정부기관의 일간 기관지가 서울신문이라면 월간지는 반상회보이다. 반상회보에는 대통령의 일상 생활에 대한 보도만이 아니라 경제현실에 대한 자의적 해설, 심지어는 수배중인 사람의 신상명세까지 적혀 나온다. 서울신문이나 TV는 제한된 독자층, 시청자를 가지고 있지만 반상회보는 4,000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대부수의 월간지라 하겠다.

예비군 훈련을 가도, 민방위훈련과정에도, TV화면에도, 반상회보에도 갑자기 80년대 들어와 혜성같이 등장한 것이 경제교육이다. 교육대상은 물론 전국민이다. 선생은 저들이 선정한 사람들이고 각본은 극히 한정된 소수에 의해 작성된다. 서민들은 물론 교육을 이수해야 할 뿐더러 KDI, 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은행 등의 쟁쟁한 박사들도 굳소리없이 이수해야 하는 것이 경제교육이다. 예를 들면 '재무부장관의 지휘하에 은행장에서 수위까지 철저히 교육시켜야 하는 것'이 경제교육의 교육방법이고 '일곱 번 반복교육'을 받아서 더욱 그 효과가 나는 것이 경제교육이다. 경제현실로부터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경제교육의 불철저로부터 경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도 말이다.

● **사대주의 발흥의 시대**: 1980년대는 사대주의 발흥의 시대이다. 조상전래의 전통음식이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동양권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보신탕업이 전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뱀탕에 대한 영업금지도 물론이다. 보신탕규제에 대한 이유인 즉은 영국, 미국 등의 애완동물보호협회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서양여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개구리요리업, 달팽이요리업이 번창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국의 전파가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는 사태도 비슷한 사대주의적 현상이다. 미국내 ABC방송 등의 TV 프로그 아무런 사전규제없이 우리나라의 TV에서 방영되고 있다. 일본의 통신위성에 의한 전파방영, 그로 인한 일본 TV문화의 직수입도 비슷한 문제가 되겠다.

양담배과동도 비슷한 풍조에서 비롯된다. 외제에 대한 지나친 선호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외제병은 수입자유화와 직결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 가속되리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최근 들어 외제 상표가 붙은 신발, 스포츠용품, 약품, 의류 등이 앞다투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대주의적 풍조를 일으키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최근에 문제된 대만 및 중공과의 스포츠문제도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스포츠가 비정치적인 문제라고는 하더라도 어느새 우리가 중공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으로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대만의 정치적 현실 등을 높이 평가한다는 말은 아니다. 지금도 대만과는 자유우방이자 혈맹관계인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중공은 공산국가이자 6.25당시의 전쟁당사자 중의 하나로 교과서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국가인 것이다. 무조건 호의만 보인다고 해서 상대방이 모든 여건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난센스가 아닐까. 사대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무정견한 체육외교의 전형이라 보인다.

금진호 상공부장관은 3월말 경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수출가격 덤핑여부의 논의와 관련하여 TV국내 시판 값의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건 물론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신문지상을 통하여 수없이 되풀이된 수출가격과 내수가격과의 현격한 가격차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던 관료들의 예전의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라 할 발언이다. 국민의 말보다는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상황,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사대주의가 발흥하는 풍토가 아닐까.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노동자들의 인간적 생활의 보장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라.

학 원

●학원 민주화 운동 점진적 고양

경찰 병력의 학원으로부터의 완전 철수 및 학원 자율화 조치가 발표된 이후 전국 각 대학에서 학원 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운동이 점진적으로 고양되고 있다. 3월6일 서울대 학도호국단 주최로 열린 학생총회를 시작으로 각대학의 민주화 운동 역량 및 조건에 따라 전개되는 운동의 형태도 다양하며 이에 대한 학교측의 대응도 가지각색이다. 언론이나 정부당국에서 흔히 비교하듯이 최근의 학원 동향은 80년의 서울의 봄(혹은 5월 민주화 운동)과 형식적으로 유사하면서도 내용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80년의 경우 3월까지의 총학생회 부활을 위한 추진위원회 활동이 중심이었고 4월에는 병영 집체 훈련 반대, 총학생회장 선거, 유신잔재 청산, 어용교수 퇴진 등이 주요한 이슈였다. 그간 진행되어 온 각 학교의 민주화 운동을 대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

민주화 운동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던 서울대의 경우는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 각과별, 단대별 운영위원회에서 언론, 학칙, 문화, 교육 등 4개 분과 위원장을 선출하여 간선제로 총위원단을 선출하였다. 연대, 고대, 성대, 이대 등의 대학에서는 기존의 학도호국단, 서울연합회, 언론기구 등의 대표자를 엮어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에 비해 대학의 기본 단위인 학과에서 선출되어 올라왔다는 점이 특색이다.

또 3월 20일에는 학자추 주최로 교내 6개의 곳에 자유의 벽을 설치했다. '최근 대중매체의 횡포 속에서 사회의 지성과 양심을 수호' 하려는 목적하에 설치된 이 벽은 '누구든지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난을 이용하라'고 하는 개방성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학자추의 고정적인 선전난으로 한정되어 있다. 물론 일반 학생들이 이용할 때 대학당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80년에 볼 수 있었던 학생대중들의 자발적이고 왕성한 대자보 활동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에는 고 한희철군 추도식을 거행 4000여명의 학생들이 교내 시위를 한 바 있다.

*연세대

3월9일 학원 민주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3월16일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학자추를 결성하였다.

또 연대는 3월 9일, 52개 서울연합회 주최로 '근로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노동 3권 보장하라' '근로기준

법 개정하라' 등 노동자의 권익실현을 위해, 개강초부터 민중의 생존권 문제를 이슈로 제기했다.

또 교내에서 배포되는 각종 유인물을 버스 등에서 배포 언론의 횡포에 대해 자율적으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서울대에서도 지난 7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다가 191명의 학생이 연행된 바 있다.

3월 29일 개최된 집회에서는 안기부 요원이 내외통신 기사를 사칭, 사진을 찍자 학생들이 이를 적발, 무전기와 신분증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내외통신에 연락하여 그런 기자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구출하러 온 또 한명의 안기부요원이 내외통신 기사를 사칭하고 기관원의 학내 출입에 항의하여 농성하는 200여명의 학생 앞에 나타나자 거짓 신분임을 다시 확인한 후 철야 농성을 풀고 이들을 거가시켰다. 서울대에서도 3월23일 총장과의 간담회 요구시 피켓팅 구호 중 안기부원 물러가라는 구호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학생들이 안기부, 보안사, 경찰서 정보과 간부들이 학원속 출입하고 있다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3.9. 3.16, 3.22 일 등에 공개토론회, 간담회, 총회 등의 행사를 가졌다. 여기서 1, 2학년의 병영집체훈련의 시키문제가 거론되었다. 매년 3월 실시되는 이 훈련 기간을 축소하고 방학때로 시기 조정하자는 것이 거론되었고 2학년은 한때 군장검사를 거부했다.

또 학교당국에서는 고대 민주화자율화추진협의회를 인정, 학교당국과 학생교수간의 협의체로 발전시키자는 제의가 있었던 점이 눈에 띈다.

*성대

3.15 공개간담회, 3.26 공청회 등을 통해 성대 민주화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4월3일 있었던 고 이윤성군 추도식에서 약 1000여명의 학생이 영정을 앞세우고 교문으로 진출, 대치한 전투경찰과 투석전을 전개했다. 학원 자율화 조치이후 첫번째 있었던 가두진출 계획 시위로서 4시간 30분 만에 주동학생에 대한 안전보장 등 19개사항을 제시하고 해산했다.

*숙대

3월 20일 1000여명의 학생이 모여 제1회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여타 대학교의 슬로건이 학자추 인정, 지도휴학 및 강제징집철폐, 학칙개정, 서울 및 학회 활성화, 학내언론 자유 등으로 비슷비슷한 데 반해 총학생회 부활을 전면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전남대

3월19일 있었던 전남대 총학생장 보궐 선거는 특징적이다. 민주적 학생을 대표하여 산출됐던 총학생장이 학점 미달로 자격 조건이 미비되었음이 밝혀져 실시된 보궐 선거

를 학생들이 간선이 아닌 직선으로 할것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시위 및 투석전이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1명 무기정학, 1명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부분의 캠퍼스에서 학자추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경미한 형태의 경고 처분에 그치는데 전남대의 경우에는 학교당국의 처벌이 강경하여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서강대 동국대 등

서강대는 지난 6일 학도호국단이 학자추의 활동을 방해하자 이에 대한 성토대회를 열고 학도호국단 간부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기관원의 학원사찰에 대해 항의 농성하다가 학교당국으로부터 교섭단체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언질을 받고 농성을 풀었다.

동국대학은 불교 대학을 중심으로 학원 자율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현 학도호국단을 활용, 학자추를 결성하였다. 타 대학의 학자추가 학도호국단의 산하 기구임에 비해 동대만이 별도의 기구로 설치했는데 예산문제, 학교당국의 인정문제 등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주목된다. 동국대와 여건이 비슷한 중앙대도 학도호국단의 주재하에 집회가 열리고 있으나 경희대는 학생처의 자금 지원으로 선출된 현총단이 민주학생과 협조하여 학원 자율화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공금 유용 혐의로 무기정학처분을 내렸다. 학도호국단과 협조가 불가능했던 한대의 경우 민주학생들이 학원 자율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다.

*기타 자발적 요구 투쟁

원광대 무역학과 학생들은 지난 3월 29일 박병호 학장이 자기 저서를 부당하게 강매한다는 이유로 농성했다. 80년에 총장 사퇴, 어용교수 퇴진 등 학원부조리시정 요구가 활발했으나 올해는 이 사건이 처음이다. 성대, 외대 조교들이 의료보험실시, 사무조교와 연구 조교의 분리를 요구하며 태업했다.

*기협, 3개 대학에 서한

서울대 성대, 동덕여대에서 취재 기자의 필름을 압수한 것에 항의하여 기협에서는 3개 대학의 총학장에게 일부 물지각한 학생의 취재권 방해에 대해 항의한다는 내용의 공한을 발송했다. 당사자인 3개 대학의 학자추에서는 직접적인 반응이 없었으나 지난 6일 서울대, 연대는 학원민주화 추진 대회를 열어 관제언론 및 학원 사찰 허수아비를 만들어 화형식을 가졌다.

*강제징집 문제 공동 조사보고 발표

5.17이후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465명 학생의 강집상태와 군부대내에서 의문의 죽음을 남긴 6명의 사인 규명에 대한 공동 조사보고가 지난 3월 18일 홍제동 성당에서 있었던 고 한희철 추도식에서 발표되었다.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대한가톨릭학생전국협의회, 한국기

독청년협의회, 명동천주교회청년단체연합회, 본연합 등 5개 청년운동단체가 공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총 27페이지로 서울의 7개대학(서울대, 고대, 성대, 연대, 강대, 외대, 경희대) 및 전남대학의 강집실태에 관한 것이었다. 서문에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겪어야 하는 엄청난 고뇌와 고통을 내외에 알리고 책임을 공감함으로써 이같은 비극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지도휴학—강제징집—녹화사업—정보제공강요—의문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정치 도구화하는 반민주적 행위이자 한국의 인권 상황의 비상사태'라고 밝혔다.

강제징집의 실태와 유형에서는 1) 시위 단순 가담으로 강집당하는 경우 2) 사찰기관에 의해 문제학생으로 지명된 경우 3) 학생대표로서 일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지도휴학된 경우 4) 시위주동학생이 강제징집당하는 경우 5) 이념서클에 관련되었거나 야학교사로 일했다는 이유로 지도휴학강집된 경우 6) 교내유인물, 스티커사건 등에 관련된 경우 7) 신체상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집된 특별한 경우 등으로 분류하고 군생활 중에는 정보제공 강요와 관세 프락치 공작을 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군생활이 과연 신성한 국방의무의 수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할 군이 정치범 수용소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6명의 사망에 대한 진상보고를 하고 있다. 이것을 간추리면,

한영현(한대 기계과) : 야학 연합회 사건으로 성동서에서 고문받음. 조사후 신체검사 결과 녹막염으로 병중 판결. 다음날 경찰서 출두후 군에 강집. 입대 후 군수사기관에서 재수사. 83년 6월 30일 총기 자살했다고 군부대에서 통고.

김두환(고대 경제학과) : 83년 1학기 행사에 관해 준비중 미시간 호텔로 불법연행 후 강집, 학생활동시 중요한 역할을 해와 군수사부대에서 100여일 동안 집요한 수사, 6월 18일 총기 자살했다고 군부대에서 통고 사망 며칠전 가족과 애인에게 보낸 편지를 볼 때 많은 의문.

정성희(연대 영독불 계열) : 81년 11월 25일 교내 시위 관련 강집. 82년 6월 첫 휴가시 군부대내에서 받은 고통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신념을 동료에게 괴려하고 귀대 후 1주일만에 사망.

이윤성(성대 사학과) : 82년 11월 3일 가두시위 때 강제징집. 3대독자로서 현역입대가 불가능자였음. 계대 몇 일 전인 83년 5월 3일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했다고 군부대에서 통고.

한희철(서울대 기계설계과) : 독일한 크리스찬. 도피중인

당국은 지도휴학제와 강제징집을 즉각 철폐하라

동료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는 쪽지를 전달하다 군부대에서 조 1반은 직후 총기 자살했다고 전해짐.

최은순(동대 수학교육과) : 84년 8월 14일 고참 사병과 언쟁끝에 오발탄에 의해 사망했다고 함.

이상이 사망한 6명에 대한 조사보고 요약이며 이날 홍제동 성당에서는 800여명의 학생이 참석, 함세웅 신부의 강론으로 한희철군 추도식을 가졌다. 추도식에서는 고 한희철군의 유서와 육성이 실린 녹음테이프가 틀어졌으며, 끝난 후 동대문 및 서대문 일대에서 결의문을 일반시민에게 전달했다.

● 경인지구 북학대책위원회 마무리 성명서 발표

지난 3월 31일 경인지구 22개 대학 북학대책위원회(이하 '북대위'로 약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사회의 민주화 없이는 진정한 복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경인지구 북대위의 활동이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이 날 채택한 성명서는 간략한 경과보고 및 사회전반에 반민주적 요소가 만연해 있는 현실에서 복교조치를 이용한 각종 선전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경찰력 개입을 비방하였다. 또 '정당한 권리회복으로서의 진정한 복학은 학원 및 사회 전반의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모든 민주세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한다'고 천명했다.

문교당국이 발표한 북학등록자 숫자는 474명으로 전체 제적생중 35%에 해당하며 경인 지역과 지방간에 비율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학등록을 신청한 제적학생중 24명은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복학이 허용되지 않아 이에 서울동대 제적생 8명은 6일간 교내 옥외에서 단식농성을 했다.

그간 진행된 북대위의 활동을 시기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 복교조치가 발표되자 이 조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각 대학별로 제적생간에 토의를 거쳐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북대위를 결성하여 기본 입장을 천명했던 시기. 이 시기에는 슬로건 채택이 아직 통일되지 않아 '무조건 전원 복교'에서부터 '선 민주화 후 전원복교'까지 다양한 형태의 이슈가 등장했다. 그러나 중요한 성과는 북학문제를 둘러싼 운동차원이 북대위라고 하는 기구를 통한 것이라는 점이 일반화되어 명분 및 홍보의 모태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두번째 : 1월 25일 경인지구북대위가 결성됨으로써 개별 대학 차원에서 연대운동 차원으로 발전하고 언론 및 정부당국과 경쟁적으로 홍보를 했던 시기. 이 시기의 특징은 경

인 지역의 전체 제적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 및 농성이 주특징을 이루며 다양한 이슈가 5개항의 요구조건으로 일치수렴되었다는 점이다. 또 강제징집 후 군부대 내에서 의문의 죽음을 남긴 6명의 학우들에 대해 종교 운동회에서 공동으로 진상조사 규명에 참여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여타 운동과의 연대가 인권 문제 차원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세번째 : 3월 1일 한빛 교회에서 확대대표자 총회가 열려 제적생들에 대한 현역 입영조치 계획이 폭로됨으로써 격화된 시기. 확대대표자 총회에서 각 대학별로 신체검사를 받은 제적학생중 현역 입영 관정이 다수라는 사실이 폭로됨으로써,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또한 제적생들의 생사까지 걸린 문제로 인식되어 서울대 등 7개대학에서 3월 8일 학교별로 총회를 열고 강제징집 및 제적생 입영 중지를 요구하게 되었다. 또 새로운 홍보활동의 형태로서 공개적으로 발표되었던 성명서를 가두, 지하철 등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형태가 개발되었다.

네번째 : 개강 이후 학원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활동이 정지되고 일단락짓는 성명서를 발표한 시기. 이 시기에는 그 동안 활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각 대학차원에서 또 경인 북대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활동을 통해서 제적학생들은 단순히 극소수 불순 학생이 아니라 학생대중의 의지를 수렴하여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제적, 투옥된 것이고 그들이 외치던 전원복교, 해직교수 원대학 복직, 언론자유보장, 노동자 생존권보장 등 민주화의 요구가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현실에서 복교조치가 허구적이라는 것을 국민 대중에게 널리 알렸다.

노 동

●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창설

1984년 3월 10일 홍제동 성당에서는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한국노협)가 창립을 선언하였다.

1970년 11월 13일 고 전태일 동지가 자신의 몸을 불살라 이 땅의 민주 노동운동에 새로운 장을 연 이후 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동일방직, 원풍모방 등의 민주노조에서 압박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다가 수많은 고초를 겪었던 민주 노동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분산적이고 고립적이던 투쟁에서 벗어나 개별기업의 차원을 넘어서 더 큰 유대를 형성하여 새로운 각오로 싸울 것을 다짐하였다. 70년대 한국 민주노동운동의 선봉에 섰던 노동자들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노협의 창립은 한국 민주화운동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것이며, 민주청년 운동에 든든한 동지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노협은 선언문을 통해 '유신독재의 어두운 시대에 민주노동조합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권력의 잔인한 탄압에 의해 희생된 당사자로서, 비조직적이고 고립분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운동의 주체성, 통일성, 연대성을 드높이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운영위원장 방용석 등지는 결성대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노동자들의 최소한 인간적 생활의 보장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라.
2. 정부는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허위 구호가 아닌 성의 있는 대책을 실시하라.
3. 현행 노동관계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아닌 소위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라는 극소수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만큼 노동자와 국민 각층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거쳐 대폭적인 개정을 해야 한다.
4. 언론은 노동자를 무시하거나 속이지만 말고 참다운 언론의 역할을 다하라.
5. 청년학생들이 노동야학과 노동현장 활동을 한다고 해서 '좌경 의식화 활동'이라고 몰아붙이는 정부 및 언론의 태도를 중지하라.
6. 청년학생들의 현장활동에 대해서 뜨거운 동지애를 보내며, 우리가 떠나왔던 고향을 지켜 농민의 권익을 신장시켜 나가는 민주농민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7. 교회와 많은 민주세력, 자유언론인들에게도 감사사를 보내며 민생·민주·민족·통일을 위하여 손에 손을 잡고 힘차게 전진하자.

또한 한국노협에서 발행한 노동절 기념대회 자료에는 태창 해고자 선언문, 인천지방 블랙리스트 사건 구속자 결의문, 청계노조 재건을 위한 투쟁선언문, 원풍노조 사건 경위 등이 함께 실려 있다. 이는 과거 각각의 사건 속에서 배출된 민주노동청년들이 새로이 연대투쟁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대회식을 마친 후 모두 운동장에 나와 마당국을 열었다. 특히 이곳에서는 '반들자 전태일 정신 부활하자 청계노조', '민주노동운동 뿌리내려 민주화 앞당기자' '노동악법 개정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석방하라 신광용' 등의 플래카드를 붙여놓아 눈길을 끌었다.

한국노협은 지학순 주교를 이사장으로, 박형규 목사 및 각계 인사 13명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민주노동청년들도 운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운영위원장 : 방용석(원풍모방 노조 지부장)
- 부위원장 : 남상헌(고려피혁 노조 지부장)
- 박순희(원풍모방 노조 부지부장)
- 김문수(한일공업 노조 지부장)
- 이종각(동일방직 노조 지부장)

- 운영위원 : 최순영(Y·H 노조 지부장)
- 조금분(반도상사 노조 지부장)
- 양승조(청계피복 노조 지부장)
- 유동우(삼원섬유 노조 분회장)
- 조경수(동남전기 노조 지부장)
- 배옥명(서통 노조 지부장)
- 민중덕(청계피복 노조 사무장)
- 정선순(원풍모방 노조 조합장)

간 사 : 이영순(콘트론타이타 노조 지부장)

● 노동절 행사

정부의 임금결정정책이 계속되고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 명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가 판을 치고 있는 금년에도 3월10일 노동절을 맞아 여러 곳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내용의 노동절 행사를 가졌다.

원래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전면파업과 투쟁에 돌입한 것을 기념하여, 전세계적으로 매년 5월 1일을 '메이 데이'로 기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무시한 채 노총과 정부기관의 주도로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놓고 있다.

어쨌든 올해도 정부기관이나 기타 기관에서도 형식적인 노동절 기념행사를 가진 데 반해, 진정으로 현 노동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 몇 군데에서 뜻깊게 이루어졌다.

* 한국 노동자복지협의회 주최 홍제동기념 행사

3월10일 홍제동 성당에서는 2천여명의 노동자·학생·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노동절 기념대회와 더불어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한국노협)'가 새로이 출발을 선언하였다. 특히 이자리에는 과거 7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민주노동조합을 위해 부단하게 투쟁해 왔던 민주노동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현장 단위를 뛰어넘는 더 큰 유대를 창조하여 계속 싸워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 한국도시산업선교회 영등포 행사

영등포 산선에서는 3월11일 노동자·학생 등 2천여명이 모여 김동완 목사의 사회로 노동절 기념 예배를 갖고 한국교회사회선교회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 정부는 임금억제 정책을 버리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
2. 기본급 1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없앤다는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3. 소위 '부당스카웃 방지' 및 '30일전 퇴직 예고제'는 위법이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블랙리스트를 영원히 폐기하라.

4.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5. 블랙리스트는 영원히 폐기되어야 하며 해고 노동자들은 원 직장으로 복직되어야 한다.
6. 노동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7. 한국노총을 비롯한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과감히 투쟁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 자리에서는 경수지역도시산업선교회를 비롯하여 각지역 산선과 기독교청년회 등이 노동절을 맞이하여 최근의 노동문제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인천교구 노동절 행사**

인천에서도 천주교 인천 교구장 나길모 주교와 3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성당에서 노동절 행사가 열렸다. 여기에서 강연회, 연극, 장기자랑 등이 베풀어졌고 대책위원회에서 최근의 노동자 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주 노동절 행사**

태창메리야스 사건으로 고난을 겪었던 전주에서는 3월 10일 이리 창인동 성당에서 박정일 주교 및 신부 6명과 노동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노동절 기념 미사를 보고 기념 놀이판을 가졌으며, 특히 가톨릭 농민회 전북 지역에서 떡을 준비해 떡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전 청계피복노조 부조합장 신광용 동지 재구속 사건
지난 3월 6일 청계피복노조 재건을 위해 애쓰던 신광용 씨가 구속되었다.

신광용씨는 지난 81년 1월, 정부에서 평화시장의 청계피복노조를 강제로 해산시키자, 서초동의 '아프리' 사무소에서 농성중 경찰의 강제 해산에 또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만이 청계노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 3층에서 뛰어내려 척추를 다쳤었다. 신광용씨는 병원에 입원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관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이소선씨, 등 10명이 석방된 뒤 몸을 치료하고 다시 평화시장에 재단사로 취직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불심검문에서 유인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입원기간중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그리고 당시 병보석증이었다는 증명서를 떼어오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하여 법원에 병보석 증명을 떼러 갔으나 바로 그곳에서 구속되었다.

정부는 81년 당시 '아프리'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풀기주면서 5공화국 이전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81년 당시 같이 투쟁했던 아프리 사건 구속자들은 또다시 힘을 모아 3월

17일 신광용석방대책위원회(위원장 신종덕)을 구성하고 신광용 동지가 석방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싸울 것을 밝혔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인쇄하여 배포한 황만호(아프리 사건 구속자 중의 한 사람) 등 7명이 3월 20일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다가 다음날 풀려났다. 신광용 동지도 동지들의 열화와 같은 투쟁에 힘입어 4월 2일 석방되었다.

●청계피복노동조합 복구대회

4월 8일 오후 3시 30분, 명동 구내에 있는 사도회관 2층 강당에서 청계피복노동조합 복구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청계피복 노동자 약 300여 명과 이소선 여사, 문익환 목사, 한국노동자복지협회의 운영위원들, 그리고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청년·학생 등 모두 6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회 벽두에 낭독된 복구선언서에 청계피복노조는 '청년노동자 전태일 동지의 분신 자결과, 아들의 뜻을 이루고자 한 이소선 어머니의 죽음을 넘은 고난과, 평화시장 노동자의 피눈물나는 투쟁, 그리고 한 청년 노동자의 육탄 고발과 호소에 총격받은 각계 민주·인권세력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1970년 11월에 탄생하여, 이후 10여 년에 걸쳐 혹사당하고 착취당하며 억압받아 온 평화시장 일대 2만여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면서 모범적 노조 활동을 전개해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존재로서 노동운동은 물론, 국민 각계의 민주·인권 운동에 끊임없이 새로운 충격과 작성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투쟁전통을 확인한 다음, '81년 1월 서울시로부터 받은 노조 해산명령이 정당한 이유도, 합법적 근거도 없는 일방적 폭력이었기에 불법무효이므로 청계노조를 원상복구하여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노조본연의 활동을 재개해 나갈 것'을 선언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라고 끝맺었다. 대회는 질서 정연한 가운데 토의를 진행하여 간부를 선출하고 (조합장: 신종덕)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1. 우리는 민주노동운동의 초석이 된다 1. 우리는 전태일 정신을 구현한다 1. 당국은 청계피복노조 해산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운동 탄압을 중지하라' 등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한국노동자복지협회는 '노동운동의 봄은 언젠가 오려나'라는 성명을 통해서 '1. 청계노동조합은 부활되어야 한다 2. 노동자의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3. 정치적 폭력행위는 뿌리뽑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청계노조의 복구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상 최초로 법의 노조가 탄생된 셈인데, 법의 노조란 자주성과 민주적 규약

을 구미하였으나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대로 당국의 신고필증을 받지 못한 노조로서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의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상위규범인 헌법의 노동3권 보장에 근거하여 단체협약 체결능력,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면책 등을 누리는데 있어서 법이론적으로 조급도 부족함이 없다. 노동관계법이 80년의 이른 바 개혁입법에 의해 위헌적인 내용으로 개악된 현실에서 법의 노조는 민주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도로써 그 귀추가 크게 주목된다.

●대우정밀 노조결성·해산

대우 계열의 방위산업체인 함양 소재 대우정밀에서는 1983년 12월 모극장에서 200여명이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몇개 공고출신들을 중심으로 강한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병역특례자들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을 요구하며 굳게 뭉쳤다.

주위의 뜻있는 사람들은 방위산업체라는 제약속에서도 조합을 결성한 대우정밀 노동자들에 커다란 기대를 걸었다. 방위산업체의 병역특례자들이, 그들의 의무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것은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다.

그러나 1984년 초의 연휴가 지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된 소식은 뜻밖에도 대우정밀 노동조합의 자진 해산이라는 것이었다.

뜻밖의 소식에 접한 사람들은 해산의 이유를 밝히고 노동조합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해산결과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농 촌

●농기부채탕감운동

현재 한국의 농업·농민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있다. 위기상황을 조장·방치한 장본인인 민정당이 농촌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사실이나(선거를 의식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에 덩달아 언론이 맞장구치고 있는 점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소작농은 70년의 33.5%에서 82년에는 46.6%로 증가하였고 식량자급율도 52%까지 떨어져 매년 식량수입에 10~2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화를 투입하고 있다. 또한 한편에서는 소·돼지 값 폭락, 과일·채소 값의 폭락 등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년 늘어만 가는 농가

빚이다. 농가빚은 1983년 7월말 현재 호당 17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증가율도 80년 30.4%, 81년 29%, 82년 32%, 83년 24%에 달하고 있다. 71년부터 82년까지 농가빚은 45.8배나 늘었으나 농가소득은 11.5배밖에 늘지 않았고 따라서 소득에 대한 빚의 비율은 8%에서 31%로 급증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 농가가 더 이상 빚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82년 7월말 현재 200만 농가의 빚총액은 무려 2조 7000억원으로 그해 추곡 전체 생산액의 70%에 해당하고, 이자부담만도 추곡대상액의 60%에 이르고 있다. 현재 농가빚이 농민에게 짓누르는 고통은, 빚 때문에 일가족이 붓짐을 싸고 야반도주를 하거나 자살하는 예가 발생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 농가빚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없는 한 농촌과 농민은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인식 하에 한국가톨릭농민회와 한국기독교 농민회는 공동으로 농가빚탕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카농과 기농은 84년 2월 29일 '농가빚 탕감하라'는 전단을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정부에 긴급대책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이 전단에서 카농과 기농은 농가빚이 누적된 원인, '수출공급위주의 공업화전략을 뒷받침해 온 저농산물 가격정책과 이를 지탱하는 무분별한 외국농축산물도입, 이른바 복합영농장려에 따른 상업적 농업생산물, 과잉생산과 가격폭락, 그리고 새마을사업, 주택개량사업 등 외형적 실적위주의 강제농정, 오키대 요컨대 반공민적인 각종 정책'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83년 11월 1일 기업정상화조치에 따른 중화학공업에 대한 1조 1천억원의 지원, 1982년 6.28조치에 따른 재능기업에 대한 1조원 이상의 이자탕감과 4000억원의 법인세 인하혜택, 1983년 3월 17일의 건설업체 지원대책,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83년 11월말 70개 해운회사에 대한 부채 8000억원의 3년간 정수유예 등에서 보듯이 타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엄청난데 반해 농업은 국민경제상의 기여도에 비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카농과 기농은 전농민적인 힘과 민주적인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부채 탕감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면서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긴급대책을 촉구하였다.

1. 상환불가능한 부채를 탕감하라.
- 1) 모든 농가빚에 대해서 향후 3년간 원리상환을 유예할 것.
- 2) 호당평균 60만원까지 모든 농민의 농협빚 원금을 탕감할 것.

당국은 청계피복노조 해산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운동 탄압을 중지하라.

농가부채는 탕감되어야 한다.

3) 과산한 농가의 빚을 보증선 농민에게서 강제징수하지 말고 개곳이 대손처분할 것.

2. 영세농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라.

1) 영세농이 비싼 사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채분만큼 특별지원금용을 실시할 것.

2) 영세농에 대한 영농자금 대출규모를 확대할 것.

3. 농업금융을 확대하고 농업금융구조를 개선하라.

1) 총금융기관 대출금과 재정투자자 중 농업부문의 비중을 농업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기여율 (82년 18%)만큼 확대할 것.

2) 단기성 대출 위주에서 중장기성 자금으로 전환할 것.

3) 영농자금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연체이자율 없애 뿐 아니라, 상환기간을 늘릴 것.

4) 농어민후계자육성자금, 축산자금, 개발자금 등이 특별한 개인에게 편중대출 되는 금융구조를 지양하고 현재 제도금융에서 소외되고 있는 영세소농 중심의 금융구조로 개선할 것.

해직교수협의회는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문제에 대해 '비판은 학문의 생명이자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생명이다'라고 견제하고 '의식화' 일반을 죄악시키는 듯한 일부 언론과 정부당국의 언행이야말로 '대학이라는 제도자체를 부정하는 가공할 사태'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학원이 정상화된 수 있는 첩경은 '학문적 자유의 보장'이고 '학원 안팎의 민주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는 일'이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학원사태는 다시 악순환을 되풀이할 불씨를 안고 있다'고 제적하였다.

그리고 해직교수협의회는 12·6 조치는 부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은 '원대학으로 돌아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막는' 기만책으로 생활의 압박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이 조치를 거부하는 것이 해직교수들의 입장이며 해직교수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교단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부당하게도 박탈된 권리의 회복이고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임을 밝혔다.

나아가서 해직교수협의회는 '앞으로도 부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비록 해직상태에 있을지라도 교육자로서 사명을 다 할 것'을 결의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회에 확산·전수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사명'임을 천명하면서 그 적극적 방법의 모색으로서 해직교수 아카데미의 발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 해직교수아카데미는 종교단체의 협력을 얻어 서울을 비롯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운영될 예정이라 하며 해직교수들의 새로운 활동방향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80년 해직언론인협회 결성

75년의 언론파동으로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직되었으며 언론은 제도언론으로 통치기구의 일부로 편입되었지만 해직된 언론인들은 조선투위, 동아투위를 결성, 민주화투쟁을 즐기치게 전개하였고 그들의 투쟁을 유신체제 하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였다.

80년 봄 민주화를 열망하는 전 국민의 열기 속에서 수많은 현직언론인들이 언론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5·17쿠데타로 언론자유는 더욱 철저히 짓밟히고 750여명의 언론인에 대한 '대량 숙청'이 자행되었다.

비록 현직 언론인은 아니지만, 이제 언론이 단순히 침묵하는 언론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수단이 되고 있는 언론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아가 민주화운동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70년대의 해직언론인과 80년도의 해직언론인들이 한데 모여 지난 84년 3월 24일 '80년 해직언론인협회'를 결성하였다.

해직언론인들은 결성에 즈음한 성명서를 통해 '80년 당시 언론부재 상황에서 광주사태와 같은 엄청난 국민적 불

행이 심화되었던 사실을 되새겨 볼 때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언론부재상황은 종식되어야 하며, 언론자유가 실현됨으로써만이 이 같은 국민적 난국타개의 길이 모색될 수 있으며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가 올바르게 수렴, 반영되는 진정한 국민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모든 분야의 민주화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1. 국민 각계각층의 침해당한 생존권에 대한 정당한 회복 노력은 존중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적극 지지한다.

1.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은 즉시 전원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

●교황 방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84년 5월 3일부터 7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다. 교황은 방한 기간중 광주 지역에서 불우한 환자와 농부들을 만날 계획이고 부산, 대구 지역에서는 공장 근로자들을 찾아 위로하며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 등 성지를 순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교황은 한국의 청년, 소년과의 만남에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교황방문의 공식성격에 대해서는 정부와 천주교측이 서로 엇갈린 발표를 한 바 있다. 83년 11월 25일 정부대변인은 교황은 '전두환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한 데 반해 천주교측은 교황은 '한국천주교회 주교단의 초청으로' 방한하며 '정부초대에 대한 예방'이고 '성경상 사목적 방문'이라고 발표하였다.

한편 교황 방한의 의미에 대해 대한가톨릭학생 전국협의회는 금년 3월 10일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의와 평화의 사도인 교황성하의 한국방문은 한국천주교회를 격려하기 위한 사목적방문이다. 이에 한국천주교회는 교황성하 방문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가 현실과 유리되고 화려한 걸치레 행사, 군중집회로 그칠 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거와 화해,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자는 200주년의 의침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교황성하의 방한은 또한 정부초대에 의한 예방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현 정권이 이룰 정치적으로 이용, '국내안정과 현정권의 합법성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과시함으로써 첨예화된 모순을 은폐 정당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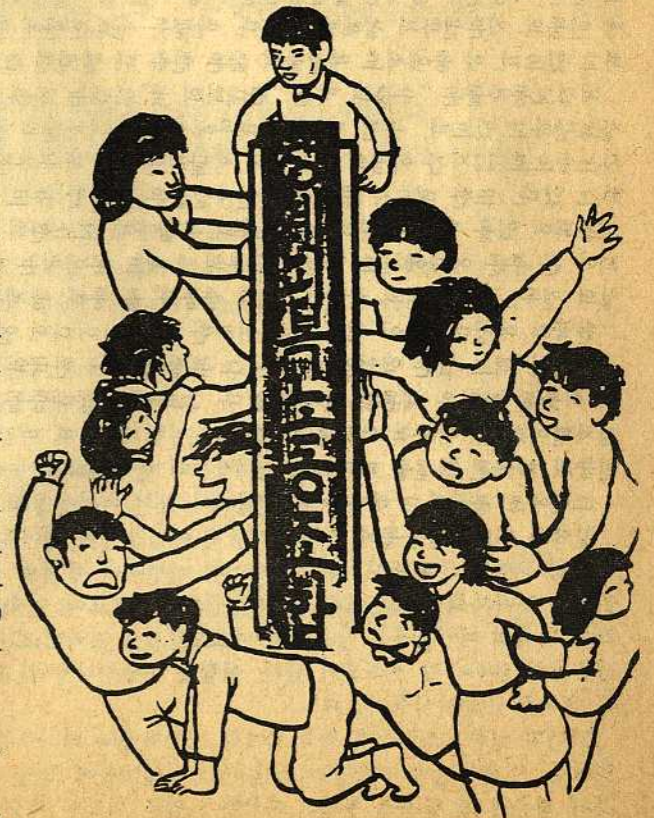
또한 한국기독교교장로회청년회로 지난 2월 18일 제25

차 총회에서 채택된 메시지를 통해 교황의 방한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였다.

'진리의 전파자인 당신이 다녀간 필리핀에서는 아키노 상원의원이 암살되고 당신이 인권의 선양을 강력히 호소한 폴란드에서는 당신이 다녀간 뒤에 자유 노조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이 땅에서 반복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교황의 방한에 따른 주요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 5월 3일 : 서울
전국천주교성직자대회(명동성당)
- ▲ 5월 4일 : 서울-광주-서울
광주에서 대중미사집전
- ▲ 5월 5일 : 서울-대구-부산-서울
노동자와 농·어민 접견
- ▲ 5월 6일 : 서울
오전 시성식 집전(여의도광장)
오후 청소년과의 만남(장충체육관)
- ▲ 5월 7일 : 이한



재야 · 종교

●해직교수 아카데미 결성

지난해 12월 6일 해직교수의 복직조치가 발표된 이래 해직된 원대학으로 복직된 교수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83년 3월 13일, 14일자 일간신문을 통해 문교부는 복직 등 화적과 26명, 임용 협의중인 교수 4명, 시간강사 6명, 해외거주자 5명, 미복직교수 44명 등으로 구분하여 마치고 다수가 복직된 양 발표하였으나, 실제로 원대학으로 복직된 명실상부한 복직교수는 한 명도 없으며 국소수의 재취업자만이 있을 뿐이다. 더우기 재취업의 거의 대부분은 12·6 조치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문교부의 발표는 거의가 허위사실이었다.

12·6 부적방침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0일 발족된 해직교수협의회에서는 '84년 3월 12일 광주에서 총회를 갖고 그간의 복직추진활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활동방향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 해직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처사였다. 2. 정부가 발표한 해직교수의 취업조치는 왜 부당한가 3. 그동안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입장. 4. 해직교수들에 대한 당국의 그릇된 인식과 불성실한 태도 5.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등 5개항목을 내용으로 하는 이 성명서에서 해직교수협의회는 학원의 문제, 학문의 자유, 부적조치의 허구성 등을 포함 학원과 사회전반에 대해 언급하였다.

정치적 폭력행위는 부리뽑아야 한다.

여성부 발족에 부쳐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발족한 지도 이미 반년의 세월이 지났다. 우리는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부문운동의 활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청년여성들의 역량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우리 청년여성들은 여성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민주화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민청련 집행위내에 여성부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에 여성부는 다음과 같은 현실인식 아래 앞으로의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해방이후 4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민족은 정치·경제·군사적인 대외종속성의 심화와 내부구조의 과행성으로 인한 계층간의 심각한 불균등상황에 놓여 있다. 게다가 분단상황에 따른 안보논리가 무원칙하게 적용됨으로써 민중의 기본권마저 침해받고 있다. 이렇듯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적 모순은 민중의 삶을 왜곡된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여성들의 삶은 한층 더 열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수출의 역군' '근대화의 꽃'이라는 찬사 속에서 12~15시간의 노동과 10만원이하의 저임금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승진 및 기타 대우에서도 남녀차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농촌여성들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으로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저급가정책과 가부장제 권위에 눌려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 주변의 빈민여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저임금으로 온갖 비공식 부문노동에 불완전하게 고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의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맡고 있다. 그 밖에도 일반적인 여성직업으로 생각되어 온 부문 어디에서도 남성의 2분의 1에도 못미치는 저임금과 성적 차별조건들이 존재한다. 특히 매춘 여성의 경우, 인간소외의 극단인 '성의 상품화'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한국의 여성대중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어디서 연유하는가?

이들이 겪고 있는 억압적 상황은 그 본질에 있어 한국의 민중이 겪고 있는 상황과 동일한 사회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성대중들은 같은 계층의 남성들이 받는 경제적 억압과 더불어 성차별이라는, 이중적 억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여성운동이 서야 할 자리는 분명해진다. 즉, 여성운동은 민중의 왜곡된 현실을 타파하고 남녀평등의 민주사회를 수립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진행되어 왔던 여성운동의 성격과 그 체적은 어떠했는가?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여성운동의 맹아는 조국의 분단과 새로운 여성 현실에 직면하여 발전적으로 수렴되지 못했다. 즉 일제말기에 반민족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일부 여성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된 여성운동은 지배자의 통치논리를 강화하는 데 급급했으며, 민족의 현실과 민중의 요구 속에 바로 서기를 거부했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운동은 상류층의 사교모임으로 전락했고 자선사업이나 소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획득 등이 여성운동의 전부인양 호도되어 왔다. 이렇듯 방향 감각을 잃고 표류하는 여성운동에 올바른 항로를 제시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층여성들이었다.

70년대 민주노조운동에 적극 참여한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여성노동자들이었으며, 판자촌 철거에 항거하던 빈민여성, 인권유린에 대항한 버스안내양, 차별대우에 맞선 간호원·교원·은행원들의 싸움도 끊이지 않았다. 이들의 생존권 및 평등권 투쟁에 자극받아 젊은 지식인 여성들도 과거 여성운동의 허위와 오류를 비판하면서 새

로운 방향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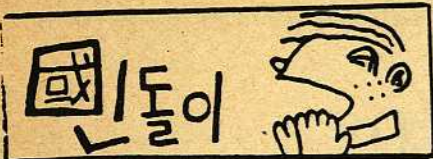
그러나 여성운동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여성들의 역량도 타운동에 비해 고립 분산되어 있으며,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뚜렷한 일치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70년대와 80년대초에 걸쳐 여성 대중들의 생존권 투쟁에서 폭로되었던 문제들을 여성운동의 과제로 받아들이는 한편, 미조직 여성들의 조직화를 통해 여성운동의 역량을 성숙시켜야 할 단계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층 여성들의 억압적 상황을 각 사회운동의 범주내에서 뚜렷이 부각시키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투쟁의 전제가 된다.

여기에서 청년여성들은 구체적인 실천과 검증을 통해 올바른 여성운동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민청련내에 여성부가 설치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1. 고립 분산된 여성 역량을 결집, 체계화하여 여성의 진정한 해방과 민주화운동을 위해 투쟁한다.
1. 기층여성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성적 억압의 현실을 폭로하고 이를 여론화하며, 이들의 운동을 지원한다.
1. 바람직한 여성운동을 지향하는 타여성세력과의 연대운동에 참여한다.
1. 우리의 현실이 요구하는 여성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을 한다.
1.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길들여지고 왜곡된 문화를 지양, 현실에 뿌리내린 건강한 여성문화를 창조한다.
1. 민주화운동 세력 내부에도 온존하고 있는 여성 차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우리는 여성운동의 발전을 돕는 모든 자발적인 요구들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에 청년여성들의 적극적인 비판과 동참을 바란다.

1984년 4월 17일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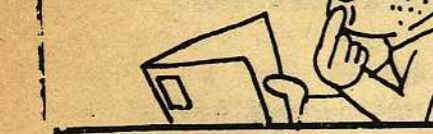
사람 알기를 파리목숨만도 못하게 여기나...



그래서... 공개처형도 생각중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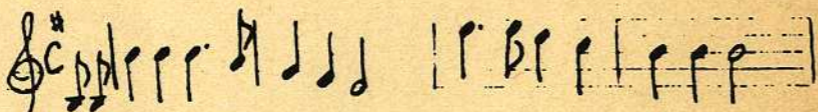
곧이어 5월이 다가올텐데... 질리는게 없나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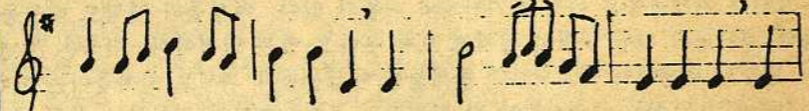
우선물이 많아야 아래것들도 많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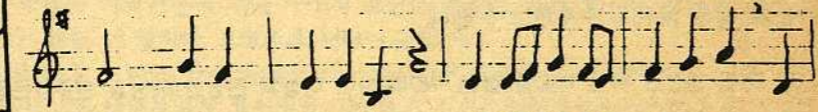
내가 이세상에 태어나



1. 내가 이세상에 태어나 깃 테기 를 벗고 서
 2. 내가 이세상에 태어나 노동자 로 태어나
 3. 내가 이세상에 태어나 농민 으 로 태어나
 4. 내가 이세상에 태어나 학 생 으 로 태어나



자 유의 세상에 살 겠 다. 나 이 어둠 을 뚫 고 싸 운 다. 저
 평 등 의 세상에 살 겠 다. 나 이 어둠 을 뚫 고 싸 운 다. 저
 해 방 의 세상에 살 겠 다. 나 이 어둠 을 뚫 고 싸 운 다. 저
 민 주 의 세상에 살 겠 다. 나 이 어둠 을 뚫 고 싸 운 다. 저



간 약 한 무 리 들 자 유를 깎 았 는 무 리 들 나
 간 약 한 무 리 들 기 만 에 살 썬 는 무 리 들 나
 간 약 한 무 리 들 기 만 에 살 썬 는 무 리 들 나
 간 약 한 무 리 들 기 만 에 살 썬 는 무 리 들 나



이 어둠 을 뚫 고 싸 운 다. 자 유의 세상에 살 겠 다.
 평 등 의 세상에 살 겠 다.
 평 등 의 세상에 살 겠 다.
 평 등 의 세상에 살 겠 다.

투고안내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회보 「민주화의 길」은 민주화운동에 동참하는 모든 이의 것입니다. 시·수필·평론·노래 등 형식에 관계없이 민주화

의 대의와 부합하는 글이라면 어떤 것이건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청련 홍보부(720-945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활동 경과 보고

1. 3·1절 기념식

● 3월 1일 오전 11시 민청련 사무실에서 3·1정신을 기리는 기념식을 가진 후 탐골(과고다)공원을 순례하였다.

2. 「노동자복지협의회」 발족에 부치는 지지 성명

● 3월 10일 홍제동 성당에서 가진 「노동자복지협의회」 창립대회에서 '민주화는 정치인이나 학생, 지식인만의 관심사요 몫이 아닙니다. 실로 군사독재하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계층이야말로 민주화를 가장 갈망하고 있는 민주화의 주체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선언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3. 기관지 「민주화의 길」 창간

● 3월 11일 기관지 「민주화의 길」을 창간함으로써 '관제언론이 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이 어둠을 뚫고 민주화운동의 앞길을 열어 가는 촛불로서 대중언론의 깃발을 높이 들 것'을 선언하였다.

● 「민주화의 길」 배포와 관련 3월 14일 오후 7시경 종로2가 4거리에서 김근태 의장이 종로경찰서 정보계장의 진두지휘하에 사복 경찰관에 의해 옷이 찢기고 땅바닥에 질질 끌리면서 영장도 없이 종로경찰서로 강제 연행되었다. 김 의장은 영장 없는 불법연행에 투항적 순응을 거부하고 물리적 강제력의 불법동원에도 동행을 거부하다가 경찰의 폭력에 의해 이런 변을 당하였다. 김 의장은 3월 16일 문래동 주검 재판소에서 구류 3일을 선고받았으나 당일 바로 석방되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은 김 근태 의장 강제 연행과 관련, 3월 15일에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지도위원들께서도 대책회의를 소집 내무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음날 의장이 석방된 후 종로경찰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폭력 경찰의 실상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성명과 「내무·법무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한편 종로경찰서로 찾아가 서장에게 금번 사태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4. 강제징집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활동

● 작년 12월 21일의 제적생 복교 조치 이후 각 대학 복교추진위원회를 통해 거론되기 시작한 강제징집 문제에 대해 본 연합을 비롯한 5개 청년단체가 「강제징집 문제 공동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 보고서는 군생활의 가혹한 처우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압박으로 자살 혹은 죽임을 당한 6명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학교 당국, 경찰, 군의 삼위일체화된 강제징집 정책에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 당국은 군부무중 사망한 6명의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라. 2. 대학은 지도휴학제를 즉각 철폐하라. 3. 당국은 강제징집과 불법적 부당처우를 즉각 중지하라. 4. 당국은 석방 학생들에 대한 징집기도를 철회하라'는 4개항의 결의를 모든 평화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실천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 또한 '84년 4월 12일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있었던 인권기도회를 통해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을 비롯한 8개 단체는 「더 이상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하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강제징집을 통한 죽음에 대해 유신체제하에서도 볼 수 없었던 권력에 의한 구조적 테러의 결과임에 분노하면서 강제징집과 지도휴학제의 철폐와 사망자의 사인규명을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위 8개 청년단체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력한 싸움을 전개하기 위해선 양심적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요청됨을 호소하였다.